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1995. 12.

조 민(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 문

민족통일은 통일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밖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기류가 한민족의 통합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야 하며, 안으로는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국내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서게 된 데에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한 결과였다는 점에서 한민족의 통일에 미치는 외재적인 규정력은 심대한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 주변국의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에 커다란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여기에는 통일의 적극적인 의지보다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했던 사정도 무시할 수 없다.

통일은 궁극적으로 민족 내부의 역량에 달려 있다. 유동적인 국제정세를 통일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대외교섭력도 민족내부의 역량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민족 내부의 역량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사회적 통합력의 반영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통일환경의 조성파 관련된 국내적 통일기반의 확립은 새로운 관심사로 부각되는 단계라 하겠다.

본 연구는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 방안의 하나로 지역갈등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노사관계 및 계층갈등, 통일에 대한 세대간 인식 차이 등과 함께 지역감정·지역갈등 해소를 통해 남한사회 내부의 사회적 통합력을 높임으로써 사회정의의 구현을

바탕으로 통일을 한걸음 앞당기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해소를 통해 공동체의 논리와 윤리를 회복함으로써 통일후 남북한간 참된 사회통합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기반 조성의 일환인 지역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의의를 강조할 수 있다.

1995. 12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요약

우리는 남북한 분단구조 위에서 영·호남 동서분열이라는 민족공동체의 空洞化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감정·지역갈등의 문제가 새로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지역갈등의 문제는 민족통일의 과제와도 깊은 연관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통일은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통일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리고 통일후 남한사회 내부 및 남북한 지역 주민간의 조화로운 사회통합을 위해서 지역갈등 문제에 대한 합리적 인식과 구체적 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서 론

지역갈등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실천적 과제 중의 하나이다. 분단체제 아래서 남북한 대결과 갈등의식의 과잉내면화 상태에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사회 내부의 지역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분단극복과 민족통일의 과정은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처럼 좁은 국토에 그것도 남북분단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감정으로 인한 지역간 대립과 갈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발전에 크나큰 장애일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지역감정과 지역갈등의 완화, 나아가 이를 해소하는 문제는 우리 민족 모두의 과제일 수밖에 없으며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한편 지역갈등의 문제는 또한 민족통일의 과제와도 깊은 연관성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통일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라면, 통일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리고 통일후 남한사회 내부와 남북한 지역주민간의 조화로운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도 지역갈등에 대한 합리적 인식과 구체적인 대응책이 요구되는 단계이다.

2. 지역감정의 존재양태

한국사회의 지역감정은 지역적 緣故에 기반한 특정 지역의 소외의식과 배타적 차별의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호남 지역에 대한 차별·배제의식과 그에 따른 호남지역의 소외의식을 일컫는다. 이러한 지역감정은 주로 일상적 생활세계에서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전국 각 지역출신들이 모이게 되는 서울에서나 군대 또는 직장사회 등의 일상적인 생활과정 속에서 표출되는 의식형태를 말한다.

지역갈등은 잠재화된 상태의 지역감정이 어떠한 사회적·정치적 계기를 통해 집단갈등의 모습으로 드러난 형태를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의 지역갈등은 지역격차에 따른 피해지역의 피해의식과

수혜지역의 방어 의식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집단 의식이 특정한 정치적 계기를 통해 표출되는 갈등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한국 사회의 지역주의는 출신·거주지역에 대한 특정한 정서적·심리적 의식 상태를 반영하는 에토스(ethos)적 지역정서가 집단적으로 형성·표출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지역적 연고에 기반한 집단 의식과 그에 따른 정치·사회적 행위 패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지역 감정이 지역 갈등으로, 지역 갈등이 지역주의로 즉, 지역 감정 → 지역 갈등 → 지역주의 → 지역 감정의 심화라는 악순환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민족 공동체 형성 과정에 부정적·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지역 문제에 대한 이성적 판단과 실천적인 해소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3. 지역 갈등의 구조와 성격

지역 갈등 해소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지역 갈등의 역사성을 지나치게 부각시킴으로써 오히려 지역 갈등을 무리하게 ‘발명’ 해내는 역기능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격차와 관련하여, 소외 지역의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줄여나가는 한편, 민간 경제 부문에서나 국가투·융자 기관에서 지역 차별화를 철폐시키는 정책적 차원의 결단이 요구된다. 셋째, 정치 엘리트 층원 과정의 사적 연고를 타파하고 인사 정책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사적 연고,

특히 지연에 의한 엘리트 충원구조는 타파되어야 하며, 기회의 균등이 모든 지역출신에게 열려있어야 한다. 편견과 고정관념에 기반한 지역감정을 극복하려는 노력에 비해 지역격차의 해소와 인재등용과정 및 엘리트 충원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문제는 결코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다. 따라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올바른 문제인식과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

선거와 지역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지역망령’이 선거국면마다 부각되면서 우리사회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치문화의 형성과정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지역감정·지역갈등에 기반한 지역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보다 깊이 각인된다면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공동체적 논리와 윤리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근대적 민족국가의 완결을 위한 민족통일의 과정에 커다란 걸림돌로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4. 지역주의 해소방안

지역감정에 의한 배제와 차별의식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간존엄성 및 인권 문제의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인종, 언어, 문화 등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인간의 양심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편견, 억측, 고정관념의 산물인 지역감정에 의한 배제와 차별의식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유린하는 사고 및 행위양식이라는 점이 널리 강조되어야 한다.

지역에 의한 배제와 차별의식의 부당성을 설득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한편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TV방송과 언론매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연구소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국민통합연구소」(가칭) 또는 「지역화합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을 통해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도 고려할 만하다.

지역갈등과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협의주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협의주의를 수용하게 되면 단순다수제의 원리에 의한 ‘全部 아니면 全無’와 같은 사활적인 정치경쟁과 갈등관계가 극복되고 하위문화 집단의 엘리트들간의 상호수용을 위한 협상의 제도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협의주의는 지역에 기반한 한국의 정치균열의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유효한 기제일 뿐 아니라, 통일후 정치·사회통합의 효율적 방안으로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나아가 협의주의는 남북한 등가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수용과 협상의 제도화를 바탕으로 통일후 예상되는 남북한간 광역화된 지역갈등과 지역주의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정치적 기제라는 점에서 한국의 정치문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주의에 대한 이해는 일반적으로 지역감정·지역갈등에 기반한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왔으나, 다른 한편 지역의 자율성과 민주성의 규범적 목표로 보는 입장에서는 지역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전

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감정·지역갈등 및 지역주의의 극복방안으로 시민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참된 지방화를 실현하는 건전한 지역주의의 구현을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분단체제 아래서 남북한 대결과 갈등의식의 과잉내면화 상태에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사회 내부의 지역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분단극복과 민족통일의 과정은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처럼 좁은 국토에 그것도 남북분단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감정으로 인한 지역간 대립과 갈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발전에 크나큰 장애일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더욱이 영호남 지역갈등의 극복을 통한 동서화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통일을 맞이한다면, 남한사회의 동서분열의 구조 위에 남북간 지역갈등의 ‘광역화’ 현상이 증첩되어 통일한국의 미래의 전망을 무척 어둡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지역갈등은 인종, 민족, 종교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근원적’ 갈등요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결코 한 사회의 통합의 질적 수준을 규정짓는 숙명적인 것으로 보거나 또는 극복이 불가능한 문제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우리 민족은 세계

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동질적인 민족이다. 우리는 오랜 수난의 역사 속에서 민족의식을 통한 강인한 구심력을 발휘해 온 민족이라는 점에서 지역감정, 지역갈등, 지역주의를 깨뜨릴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목 차

제 I 장 서 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4
제 II 장 지역감정의 존재양태	8
1. 지역문제의 이해	8
가. 지역감정	8
나. 지역갈등	11
다. 지역주의	11
2. 지역감정의 실태	16
3. 지역감정의 형성 및 심화 시기	19
4. 소결론	22
제 III 장 지역갈등의 구조와 성격	26
1. 지역갈등의 역사성	26
2. 지역격차와 지역갈등	30
가. 경제적 격차와 지역갈등	30
나. 엘리트 충원과정과 지역갈등	38
3. 정치과정과 지역주의	47
가. 선거와 지역주의	47

나. 지역이데올로기와 지역분할구도	51
4. 소결론	57
제Ⅳ장 지역주의 해소 방안: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 방안	59
1. 통일후 지역갈등 양상	59
2. 지역주의 해소 방안	61
가. 지역감정 해소방안	61
나. 지역갈등 극복과 대안적 모델:	
‘협업주의(consociationalism)’	67
다. 시민사회의 민주화 및 지방화	70
V. 결 론	79
참고문헌	83

표목차

<표 1> 지역감정의 형성시기	20
<표 2> 지역감정의 심화시기	21
<표 3> 1백개 대기업 임원의 출신도별 분포	32
<표 4> 지역별 주요 지표	38
<표 5> 공화국별 사법엘리트의 출생배경	41
<표 6> 6공화국 핵심적 파워엘리트의 출생배경	43
<표 7> '92 대선과 지역감정 심화여부	51

제 I 장 서 론

1. 연구목적

민족통일은 우리 민족 최대의 숙원이다. 그러나 해방 50주년은 분단 50주년이라는 뼈아픈 역사로 이어져 아직도 결손국가 상태에서 미완의 근대사를 극복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단구조 위에서 동서분열이라는 민족공동체의 空洞化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체제와 이념의 차이에 의한 남북분단과 함께 지역감정에 의한 동서분열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흔히 ‘망국병’으로까지 불리우기도 한다.

최근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감정으로 인한 지역갈등의 문제가 새로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지역갈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새삼 새롭게 인식해야 할 과제도 아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 한편에서는 지역감정 또는 지역갈등이라는 용어에 무척 익숙해져 있어 오히려 무감각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없지 않다. 다른 한편, 지역갈등 해소라는 당위적 언명의 반복과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천적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지역갈등 문제에 냉소적 반응을 보이거나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하나의 구호화된 수준에 그치고 마는 경우도 많다.¹⁾

1) 지역감정·지역갈등 문제에 대한 모든 국민의 관심에 비해 뚜렷한 해소

지역갈등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실천적 과제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분단체제 아래서 남북한 대결과 갈등의식의 과잉내면화 상태에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사회 내부의 지역갈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분단극복과 민족통일의 과정에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처럼 좁은 국토에 그것도 남북분단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감정으로 인한 지역간 대립과 갈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발전에 크나큰 장애일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지역감정과 지역갈등의 완화, 나아가 이를 해소하는 문제는 우리 민족 모두의 과제일 수밖에 없으며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우리 사회에서 지역갈등의 객관적 요인들은 단순한 심리적 긴장이나 대립을 넘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계급, 인종, 종족, 성별 및 세대간의 차이에 따라 개인과 집단 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과 갈등의 상태는 대개의 경우 인간의 양식과 이성적 판단에의 호소를 통해 갈등의 수준이 완화되거나 해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달리 특정한 갈등현상은 개인과 집단의 합리적 행위패턴을 넘어 비이성적인 배타적 감정을 유발시켜 사회적으로 엄청난

의 전망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과 정치엘리트층의 언행의 불일치 등이 이 문제에 대한 냉소적 반응의 극복을 어렵게 만든다.

난 역기능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한편 지역갈등의 문제는 또한 민족통일의 과제와도 깊은 연관성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통일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라면, 통일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리고 통일후 남한사회 내부와 남북한 지역주민간의 조화로운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도 지역갈등 문제에 대한 합리적 인식과 구체적 대응책이 요구되는 단계라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고의 연구목적과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보았다.

첫째, 지역감정의 본질과 실태, 형성 및 심화과정 그리고 다양한 해소방안 등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닌 지역감정 및 지역갈등 구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했다.

둘째, 우리 사회의 지역갈등 문제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적 통합과 지방자치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민족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선결적 과제인 내적 갈등을 극복하고 ‘참된 화해와 하나됨’을 향하여 국민적 공동체를 회복하여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의식을 되찾고자 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두었다.

셋째, 민족통일의 과정에서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는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통일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를 강조할 수 있다. 특히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문제는 새로운 국민국가의 건설과정에 상당한 장애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통일후 남한 사회 내부의 지역주의가 남북한간 '광역화된 지역주의'와 어떻게 결부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우리의 관심을 끈다. 이런 점에서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남한사회 내부의 지역갈등의 선결적 해소야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연구방법

지역감정·지역갈등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방식은 크게 두 방향으로 대별된다. 하나는 지역감정의 실상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적 조사방법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통계적 분석 방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사방법은 심리학, 사회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통계처리를 통한 분석결과는 그 자체가 지역감정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결과가 이 분야 연구의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된다는 점에서도 유용성이 높다. 또 다른 연구방향은 우리 사회의 지역감정·지역갈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일단 전제하고 지역감정·지역갈등의 역사, 존재양태, 형성 및 심화과정과 그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 그리고 다양한 해소방안의 모색 등을 연구방향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연구과정에는 물론 앞의 실증적 연구분석의 결과가 일차적인 자료로서 활용된다.

한편, 우리 사회의 지역감정·지역갈등 문제에 접근하는 문제

의식은 대개 사회문화적 인식과 이와 달리 지역갈등의 요인을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접근방법으로 나뉘볼 수 있다. 전자는 특히 지역감정을 사회문화적, 심리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편견과 편견의 내면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고정관념의 형성 등 탈개성화와 집단인식화의 입장에서 지역감정을 바라본다. 따라서 지역감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격차해소 또는 정책적 차원의 대응요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개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의 극복 즉, 생활영역에서의 태도변화가 본질적임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후자의 입장에 따르면 지역갈등은 정치엘리트층의 배출통로 독점과 지역적으로 왜곡된 산업화과정 및 경제발전의 불균등성에 따른 지역격차가 지역갈등을 유발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입장은 지역갈등의 해결 전망을 정치·경제적 차별성의 극복에 초점을 둔다.

지역감정·지역갈등 문제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이나 정치·경제적 접근은 상호 배타적인 이해방법은 아니나, 지역감정·지역갈등의 형성과 심화요인의 규명과 문제해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정치·경제적 이해와 접근방법은 정치권력 및 경제적 자원의 합리적 배분여하에 따라 지역갈등이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을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반면 편견 및 고정관념에 의한 개개인의 태도변화를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접근방법은 지역감정의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인간 심성의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지역감정의 해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는 것을 전제로 개개인의 초기 사회화과정에서부터 지속적·장기적인 노력과 함께 다양한 차원에서 대응방안의 모색을 역설한다.

본고에서는 지역감정·지역갈등 문제를 설명하고 나아가 해결의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양자의 접근방법의 유용성을 함께 수용한다. 지역감정의 해소는 개개인의 도덕적 자각을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차원에서 실천적 노력이 요청된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 이해방식과 해소방안의 타당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지역갈등 문제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방식은 정책적 차원을 비롯하여 정치엘리트층의 각성을 통해 해결의 전망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II장 지역감정의 존재양태

1. 지역문제의 이해

지역감정, 지역갈등, 지역주의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엄밀한 개념적 이해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호 커다란 차별없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감정, 지역갈등, 지역주의는 상호 내재적 연관성을 지니면서도 각각의 의미와 수준의 차이로 인해 개념적 구분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지역감정, 지역갈등, 지역주의를 일단 지역문제라는 범주 속에서 포괄하여 접근한다.

가. 지역감정

지역감정은 지역적 구분이 다수의 집단의식을 형성하는 준거가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지역감정의 규명은 다양한 사회집단 형성의 준거들 중에서 왜, 어떻게하여 특별히 ‘지역’이라는 준거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회적 정체감을 제공하고 강한 집단의식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데에서 부터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지역감정을 ‘지역적 緣故에 기반한 특정 지역의 소의의식과 배타적 차별의식’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호남지역에 대한 차별·배제의식과 그에 따른 호남지역의 소의

의식을 일컫는다. 이러한 지역감정은 주로 일상적 생활세계에서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전국 각 지역출신들이 모이게 되는 서울에서나 군대 또는 직장사회 등의 일상적인 생활과정 속에서 표출되는 의식형태를 말한다.

지역감정은 일반적으로 편견과 고정관념의 산물로 이해될 수 있다. 지역감정을 “지연에 기초하여 형성된 여타지역(민)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견적인 속성의 심리상태”라는 정의에서 보듯이 지역감정은 부정적·편견적 속성을 강하게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¹⁾

우리 사회의 지역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인종간의 갈등문제를 편견과 고정관념의 산물로 접근한 미국 심리학계의 연구방법을 차용하여 이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먼저 시도해 보자. 일찌기 올포트(Allport)는 미국사회의 인종간 차별의식을 특정한 편견과 고정관념의 소산으로 보면서, 편견(prejudice)을 “충분한 근거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²⁾으로 정의한 바 있다. 그리고 애쉬모어(Ashmore)와 델 보카(Del Boca)는 편견을 “사회적으로 정의된 집단에 대하여, 그리고 그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갖는 부정적 태도”³⁾로 규정하였다. 물론 다른 집단을 충

1) 조경근, “정치사회화 시각에서 본 영호남간 지역감정 실재와 악화 및 그 해소,” 1987년 한국정치학회 재북미 정치학자회 합동학술대회 발표논문.

2) G. W. Allport,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ss.: Addison-Wesley, 1954), p. 6.

3) R. D. Ashmore & F. K. Del Boca, “Psychological approach to understanding intergroup conflict,” P. A. Katz ed., *Towards the Elimination*

분한 근거없이 좋게 생각하는 것도 편향된 견해로서 편견의 또 다른 한 형태이지만, 편견이 문제되는 경우는 대상에 대한 나쁜 태도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부정적 태도를 유발하는 편견만이 연구대상이 된다. 고정관념(stereotype)은 편견의 인지·판단 및 감정의 두 요소 중 인지요소를 일컫는 것으로 “어떤 인간집단의 속성에 관한 신념”⁴⁾ 또는 “어떤 범주에 연합된 과장된 신념”⁵⁾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어떤 범주의 사람, 제도 혹은 사건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지나치게 단순화된 심상으로, 이러한 단순화된 심상은 대개 편견을 동반하는 특성이 있다.

편견을 지닌 사람은, 올포트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항상 자신의 관점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특정한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편견을 유지하기 위해 그 반대되는 증거들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속성이 있다. 편견은 단순한 오해와는 달리 상반되는 모든 증거들을 능동적으로 거부하는 경향이 있으며, 편견이 반대되는 증거들에 의해 위협받게 될 경우 정서적 안정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다.⁶⁾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지역감정은 그것의 형성배경, 강화요인 등이 어떻든지 간에 편견과 고

of Racism (New York: Pergamon Press, 1976), p. 74.

4) R. D. Ashmore & F. K. Del Boca, “Conceptual approaches to stereotypes and stereotyping,” D. L. Hamilton, ed.,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 (Hillsdale, N.J.: LRA, 1981), p. 16.

5) G. W. Allport, *The Nature of Prejudice*, p. 191.

6) G. W. Allport, *The Nature of Prejudice*, p. 9.

정관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이성적 감성과 불합리한 태도의 한 형태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지역갈등

지역갈등은 잠재화된 상태의 지역감정이 어떠한 사회적·정치적 계기를 통해 집단갈등의 모습으로 드러난 형태를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의 지역갈등은 지역격차에 따른 피해지역의 피해의식과 수혜지역의 방어의식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집단의식이 특정한 정치적 계기를 통해 표출되는 갈등현상으로 볼 수 있다. 지역감정이 개인적 차원에서 일상적인 생활세계에서 나타나는 심리적·문화적 반응이라면, 지역갈등은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객관적 차별성에 근거한다. 이를테면 우리 사회에서 지역갈등은 경제적 격차 및 정치적 배제와 깊은 상관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갈등은 정치투쟁의 영역에서 곧장 지역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역갈등의 정도 및 수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 지역주의

‘지역’이라는 개념은 인접지역과 그 자연적 문화적 특성을 달리 하는 동질적 공간으로 정의된다. 지역은 국토의 일부이면서도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주민 상호간의 높은 일체감과 통합성을 갖는다. 지역주의라는 용어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이데올로기

로서, 사회운동으로서, 혹은 지역개발계획의 이론적 근거로서 지역이념을 함의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이나 지역주의는 공동체와 국가의 중간 정도의 범주로 사용된다. 지역주의(Regionalism)는 지방파벌주의와는 구별된다. 지방파벌주의가 지리결정론적인 것임에 비해 지역주의는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 결정되는 특징을 지니며, 어떤 ‘구획(Section)’과는 달리 ‘지역’은 그것이 속해 있는 국가 단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또한 정의내려질 수도 없다.⁷⁾

지역주의는 흔히 종족주의, 민족주의 등과 같이 지역이라는 공동사회에 대한 강한 귀속감을 가리킨다. 그러나 지역공동체의 규모가 원초적 촌락보다 큰 경우 공동체의식은 사실 상상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앤드슨(Anderson)이 민족주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 대한 귀속감을 유대로 한 지역주의도 하나의 ‘가공된 공동체의식’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는 서구 역사에서 보듯이 국민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있었던 종족, 언어, 종교 등 다양한 분권적 요소가 쇠퇴하지 않고 지역적으로 계승되면서 지역문화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지역주의는 산업화과정에서 산업적 이해관계가 지역적 이해관계로 나타날 때 집단적·계급적 이익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지

7) Carol E. Heim, “지역주의와 국민경제발전: 이론적 배경과 미국의 경험,” 「국가발전과 지역주의」, 금호문화재단 주최 국제학술회의(1987. 5. 7~9) 자료집, pp. 22~23.

8)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New York: Verso, 1983), pp. 1~7.

역주의는 이처럼 본원적, 공동사회적 측면을 지니면서도 역사적, 이익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의는 일차적인 공동사회에 대해 가지는 순수한 의식상태와는 다르다. 그것은 지역주의가 역사적 산물임과 동시에 사회이익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주의는 홉스봄(Hobsbawm)의 이해 방식에 따라 하나의 ‘발명품’ 또는 ‘발명된 전통’⁹⁾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지역주의는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어떤 지역이 그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응 또는 도전을 함축한 용어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가끔 분리주의(Sectionalism)라는 극단적 형식을 갖기도 한다. 서구사회에서 지역주의의 정치적 논의는 문화, 언어, 종교 등의 차이에 따른 집단 의식과 결부되어 흔히 분리주의 운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적극적인 정치운동으로서의 지방분리주의는 최근 유럽과 캐나다 등지에서 뚜렷이 대두되고 있는데, 대개 불균형경제발전과정 속에서 비교적 후진지역이나 또는 주변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성장 지역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정체상태에 놓인 더 큰 국가구조에 의해 포위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 분리주의 운동과 결탁된 정치운동이 전개되기도 한다.¹⁰⁾

아시아지역의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는 서구와는

9) Eric Hobsbawm and Trencce Ranger, eds., *The Invention of Tradition*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83), pp. 1~14.

10) 네언은 국가 내의 민족주의 감정과 분리주의 감정의 형성과정을 중심-주변부 개념에 의한 한 국가의 内部植民地 이론으로 접근하고 있다. Naim Tom, *The Break-up of Britain* (London: New Left Books, 1977) 참조.

또 다른 형태를 띤다. 이 지역에서의 지역주의는 대개 인종, 종족, 종교, 문화 등으로 구분되고 있는 지리적 공간에 대한 언명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반응, 이를테면 중앙·지방 간의 다양한 형태의 갈등 표출로 드러난다. ‘지역’이 갈등을 함의할 때 통상 섹션(section)으로 불리우는데, 이러한 섹셔널리즘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경우처럼 분리·자주적 민족주의를 선언하는 정치적 독립에 의하여 절정에 이른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역주의 동향은 자바인과 자바 이외의 섬주민들 사이의 관계형태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정치적 영향력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바인들은 자바 밖의 지역의 경제적 자원을 통제하고 있다. 자바 밖의 섬주민들은 그 대신에 정치적 권력을 배분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자바인들은 그러한 요구를 거절하고 국가에 대한 그들의 통치를 지속하는 가운데 자연히 지역주의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자바와 자바 이외의 섬지역을 이원화시키는 지역감정이 뿌리깊게 남게 되었다.¹¹⁾

문화적 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데에는 종종 두 가지 전략 즉, ‘동화’와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방안이 사용된다. ‘동화’란 다양한 민족문화 가운데 지배적 인종의 문화와 소수

11) 인도네시아에서는 내각을 비롯하여 군부와 경찰 상층부의 요직뿐만 아니라 자바 이외의 섬지역의 공직도 대부분 자바출신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소수민족의 존재를 위협하고 비자발적 전통을 파괴하는 자바문화 중심의 정부정책은 많은 저항을 유발시켜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종의 고유문화가 상호 수렴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수인종의 문화적 고유성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이에 비해 ‘다양성 속의 통일’은 소수인종의 문화적 고유성을 보장하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국민적 통합을 창출하는 것을 지향한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동화’보다는 ‘다양성 속의 통일’을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모토로 부각시켰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이 ‘다양성 속의 통일’ 정책을 슬로건이나 상징 수준을 넘어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가 지역주의 이념에 의한 분열상을 극복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¹²⁾

한국사회의 지역주의는 유럽·캐나다 그리고 동아시아 등지의 지역주의와 발생의 배경, 성격, 형태 등의 측면에서 전혀 유사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오랜 중앙집권체제의 전통 속에서 강한 민족적 정체감과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구조를 형성해 왔다는 점에서 분권적이거나 분리주의적 전통은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지역주의는 출신·거주지역에 대한 특정한 정서적·심리적 의식상태를 반영하는 에토스(*ethos*)적 지역정서가 집단적으로 형성·표출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지역적 연고에 기반한 집단의 식과 그에 따른 정치·사회적 행위패턴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정치에서 지역의식 또는 지역감정이 ‘지역패

12) 인도네시아에서 지역주의는 케다에라한(*kedaerahan*), 즉 지협주의(*Parochialism*) 혹은 지방제일주의로 불리운다. 나자루딘 잠수단, “인도네시아에 있어서의 지역주의,” 금호문화재단 주최 국제학술회의, 앞의 자료집 참조.

권주의’, ‘지역할거주의’, ‘지역등권론’ 등으로 보다 체계화되고 실천적 욕구를 가지게 되면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지역주의가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되는 현상이 목격된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정치사회적 형태로 표출되는 지역갈등이 점차 구조화되고 지역이데올로기로 발전할 수도 있는 과도기적 상황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역주의가 분리주의나 분열의 형태로 드러나 민족적 정체감을 훼손시키는 상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패권주의나 지역적 우월의식이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감정이 지역갈등으로, 지역갈등이 지역주의로, 즉 지역감정 → 지역갈등 → 지역주의 → 지역감정의 심화라는 악순환과정이 되풀이되면서 민족공동체 형성과정에 부정적·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지역문제에 대한 이성적 판단과 실천적인 해소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2. 지역감정의 실태

우리 사회에서 지역의식, 즉 지역정체성은 국가·민족의식보다 높다는 사실은 지역감정의 실태를 설문조사한 연구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지역의식과 국가·민족의식이 동일한 수준에서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특정한 지역에 기반한 집단의식이 보다 큰 상위의 국가·민족에의 共屬意識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만 하다. 출신지역에 대한 확고한 애착이나 가치부여를

하는 지역적 귀속감이나 지역연고의식은 자기중심적 집단의식에 의해 배타적 감정, 즉 지역감정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국민 전체가 인식하고 있는 지역감정의 총체적 실상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 한남대 지역개발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난 13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치르면서 표출된 지역갈등, 특히 영·호남간의 지역갈등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난치병 중의 하나로 지적됨과 동시에 그 해결전망이 결코 밝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에서 국가 및 지역의 정체성, 지역감정의 실태와 특징, 지역감정의 사회화, 지역감정의 형성·악화요인, 광주항쟁과 지역감정간의 상관관계 등을 지표로 설정하여 면접조사한 내용 가운데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의 심각성에 대해 아주 높은 수준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여기서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이 ‘대단히 심각하다’(29.8%)와 ‘심각하다’(49.1%)는 반응이 전체 응답자의 78.9%의 수치를 보여 우리 사회의 분열의 정도가 상당한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감정의 심각도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역감정과 관련된 소문을 별다른 확인없이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부정적 소문의 수용 정도>에 대해 ‘그럴 것으로 믿는다’(30.3%)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52.7%) 라고 응답한 비율이 83%나 달해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지역감정과 관련된 소문을 별다른 확인없이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다.¹³⁾

13) 박용남, “오늘의 지역감정 실태,” 『지역감정연구』 (서울: 학민사, 1991) 참조.

이처럼 부정적 소문이 그것에 대한 진위여부에 상관없이 전폭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점은 지역감정에 내포된 자기확신성과 편견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소문이 반복적으로 수용될 경우 지역감정은 편견을 넘어 고정관념으로 자리잡고 사회화과정을 거쳐 더욱 뿌듯한 형태로 지역감정이 실체화되는 가능성이 항존하게 된다.

한편 지역감정이 완화, 해소되지 않고 재생산되는 데에는 지역감정의 사회화과정과 깊은 상관성을 지닌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화란 개인이 각자에게만 특유한 자아성 혹은 퍼스널리티를 형성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각 사회가 고유한 문화적 유산을 세대에서 세대로 면면이 전승해 가는 과정을 총칭한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화는 개인들 속에다 집단의 문화적인 내용을 심고 일구는 과정을 의미한다.¹⁴⁾ 사회화의 주체는 가족, 동년배그룹, 직장, 정당, 특수집단인 군대 그리고 대중매체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족 및 이웃은 모든 정치사회화의 매체들 중에서 사회화의 원초적 기능을 수행하는 집단으로 가장 지속적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대부분 설문조사의 경우 가정과 이웃으로부터 지역감정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가족 및 이웃을 통한 지역감정적 언사의 경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부모나 형제자매, 친척 및 이웃으로부터 상대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견적인 속성의 제 영향을 학

14)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사회학적 관심」 (서울: 박영사, 1981), pp. 221~222.

습하거나 학습받는다든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¹⁵⁾

특히 지역감정의 사회화과정에 미치는 매스컴의 영향은 심각한 수준이라 할 것이다. 앞의 설문조사에서 신문이나 TV 등의 매스컴이 지역감정을 조장했다고 믿는 정도는 ‘그렇다’의 35.4%와 ‘약간 그렇다’의 38.2%로 전체 응답자의 73.6%의 반응도를 보이고 있는데, 더욱이 학력이 높을수록 지역감정에 대한 매스컴의 부정적 영향을 강하게 지적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¹⁶⁾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公器임을 자임하는 매스컴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감정의 형성주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지역감정의 형성 및 심화 시기

한국사회학회의 1988년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지역감정의 형성 및 심화의 시기를 묻는 면접조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간의 경제적 차이가 발생하게 된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조선시대를 꼽은 경우가 8%, 일제시대 45%, 자유당시대 11%, 공화당시대 41% 그리고 8%가 민정당시대(모르겠음 28%)라고 응답하고 있다. 여기서는 공화당시대에 지역간의 경제적 차이가 형성되었다

15) 김혜숙,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 세대간 전이는 존재하는가?”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서울: 성원사, 1988) 참조.

16) 박용남, “오늘의 지역감정 실태” 참조.

고 보는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⁷⁾

지역감정의 형성시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표 1>에서와 같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조선시대 17%, 일제시대 2%, 자유당시대 10%, 공화당시대 31% 그리고 17%가 민정당시대(모르겠음 24%)로 대답하여 공화당시대를 지역감정이 형성된 시기라고 보는 사람이 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 1> 지역감정의 형성시기

조선시대	17%
일제시대	2%
자유당시대	10%
공화당시대	31%
민정당시대	17%
모르겠음	24%

자료: 「한국일보」, 1989. 1. 1. 재구성.

다음으로 지역감정이 심화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는 <표 2>에서와 같이 조선시대 1%, 일제시대 1%, 자유당시대 4%, 공화당시대 26%, 민정당시대 49%로 응답하여 (모르겠음 19%), 응답자의 거의 과반수 정도가 민정당시대에 와서 지역감정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다.

17) 「한국일보」, 1989. 1. 1; 유석춘·심재범,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두가지 기반: 계급(계층)의식과 지역차별의식,”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감정」 (서울: 성원사, 1989) 참조.

<표 2> 지역감정의 심화시기

조선시대	1%
일제시대	1%
자유당시대	4%
공화당시대	26%
민정당시대	49%
모르겠음	19%

자료: 「한국일보」, 1989. 1. 1. 재구성.

이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역간의 경제적 차이가 1960년대 공화당시대 추진된 경제개발과 산업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감정의 형성시기는 본격적인 경제개발과 산업화 단계와는 상관없이 조선시대, 일제시대 그리고 자유당시대로부터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까지 형성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거의 30%에 이른다. 그러나 지역감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시기는 지역감정의 형성시기와는 달리, 1960년대의 산업화 이전단계에서는 전체의 5%에 불과하여 ‘사회문제화된 지역감정’이라는 차원에서 그 이전 시기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역감정의 형성시기와 그것이 사회문제화된 시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 사회의 지역감정이 이미 조선시대로부터 형성되었다는 반응이 적지 않은 수준(17%)에 이르고 있으나, 지역감정 자체가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처럼 지역감정이 사회문제로 드러나게 된 시기에 대한 인식은 해방전까지는 거의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며, 자유당시대에도 기껏 4%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지역감정이 비록 전근대시대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사회갈등의 한 형태로서 드러나는 ‘사회화된 지역감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4. 소결론

모든 집단관계에서 내집단(In-group)을 선호하고 다른 집단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는 경향은 인간의 자연적 심성의 발로에 따른 보편적 현상이나, 한국사회에서 지역의식에 기반한 親疎感은 다른 형태의 집단의식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친소감의 표출이 다른 지역인에 대한 차별과 배타성으로 나타난다면 사회적 균열과 갈등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친소감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의 지역간 거리감과 好惡度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의 대부분은 거의 비슷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한국사회학회가 조사한 가족의 배우자, 가까운 친구와 이웃, 사업동반자 등의 관계에 있어 호오도를 조사한 연구분석에 따르면, 거부감의 정도가 호남인에 대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이북출신, 영남, 서울, 제주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충청, 강원, 경기 지역민은 상대지

역으로부터 거부감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⁸⁾ 그리고 타지역민에 대한 배타성에 있어서는 제주, 영남, 강원, 충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전남, 충남에서는 타 지역에 대한 배타성이 낮았다.¹⁹⁾ 지역간 호오도 및 거리감에 대한 조사연구의 결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²⁰⁾

첫째, 우리 사회의 지역감정은 호남인에 대한 여타 지역민의 편견, 부정적 감정, 고정관념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본적 특징이다.

둘째, 호남 사람의 지역감정은 현실적 차별에 근거한 반면, 영남 사람의 지역감정은 호남 사람의 성격과 행동양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결론이다. 편견, 즉 집단적대감의 원인 및 근거를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피해자-체제(victim-system)’ 차원을 제시하는 이론에 의하면, ‘피해자’쪽 끝은 집단적대감이 전적으로 피해자의 특성(예컨대 성격, 태도, 신념, 문화 등)에 원인이 있다고 보며, 반면 ‘체제’쪽 끝은 전적으로 사회의 구조적 특성(예컨대 권력관계, 자원배분, 제도적 구조 및 과정 등)에 집단적대감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²¹⁾ 이러한 ‘피해자-체제’론에 따르면, 영남 사람은 ‘피해자’쪽의 끝에 서서, 호남 사

18) 나간채, “지역(민)간의 사회적 거리감,”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서울: 성원사, 1989) 참조.

19) 김만홍, 「한국사회지역갈등연구」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87) 참조.

20) 최홍국, 「한국인의 투표성향과 지역감정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88), p. 61.

21) M. Chesler,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ies of racism,” P. A. Katz ed., *Towards the Elimination of Racism*, pp. 21~72.

람은 ‘체제’쪽의 끝에 서서 두 집단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으로 설명된다.²²⁾ 요컨대 호남인의 지역감정은 현실적 위협에 그 근거를 둔 것이라 한다면, 영남인의 지역감정은 호남인의 특성에 초점을 둔 상징적 지역감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편견 또는 부정적 관념이 해소되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이는 그 집단의 가치 내지는 문화로 정착되며, 사회문화적 학습과정을 통해 다음 세대로 계속 전승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지역감정에 대한 시급한 해결책 모색이 요망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에서 지역문제가 심각한 정치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데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을 결코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광주항쟁이 지역문제에 끼친 영향은 사건의 성격이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일면적·단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광주항쟁을 유발하여 집권한 군부정권은 집권기간 동안 계속 정통성문제로 시달려야 했고, 결국 정권을 상실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80년대 들어 지배권력집단은 줄곧 ‘광주문제’를 지역문제로 축소시켜 전국민적 이해관계 속에서 접근하는 것을 거부했다. ‘광주문제’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자 한 지배권력집단은 이 문제를 특정 정치인의 지역감정에 편승한 음모와 사주에 의한 하나의 폭동사태였다는 이미지를 조작해 왔다.

그러나 광주를 왜곡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유포할수록 ‘광주문제’는 우월한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동시에, ‘광주’는 신비

22) 김진국, “영·호남대학생의 상호간 차이 지각 연구,” 『사회심리학연구』, 3~2 (서울: 한국사회심리학연구회, 1987), pp. 113~147.

화되면서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 부각되었다. 반면, 군부지배집단은 언론통제와 한편으로는 언론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광주문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시켰다. 그러한 부정적 이미지의 수용 정도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간 정치의식의 편차는 더욱 고정되고 서로 대립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²³⁾

더욱이 '80년대에 지배권력집단에 의해 강화된 호남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우리 사회의 지역감정의 구조를 호남 대 비호남으로 전치시켜 호남고립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그후 수차례의 선거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바, 호남에 기반을 둔 정당뿐만 아니라 비호남지역의 정당도 호남을 포용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한국정치에서 지역정당을 극복하고 진정한 국민정당의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광주'를 통해 우리 사회는 더욱 심화되고 왜곡된 형태의 지역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해결이 유보된 상태에서는 결코 우리 사회의 지역감정·지역갈등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3) 정근식, "광주민중항쟁과 지역문제," 「지역감정연구」 참조.

제Ⅲ장 지역갈등의 구조와 성격

1. 지역갈등의 역사성

한국사회에서 지역갈등은 어제 오늘 발생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의 뿌리를 소급하여 이해함으로써 지역갈등의 원인과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견해들 중에는 지역에 기반한 집단갈등 현상을 전통적인 파벌의식이나 지역패권주의의 한 형태로 파악하는 입장¹⁾과 더불어, 우리 사회 지역갈등의 역사성을 근원적으로 해명함으로써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는 지속성을 강조하여 지역갈등의 문제를 단순히 근대화에 발맞춘 경제개발과 산업화시대의 산물로만 이해하는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도 제시되고 있다.

최근 서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간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지역차별의 정치경제학적 시각에 기반하여 지역불균형의 역사적 조건을 검토한 논의 등이 주목을 끈다. 우리는 대개 한국의 정치사회 지형을 유기적으로 분열시키는 기제 중 지역갈등을 으뜸으로 손꼽는다. 그런데 지역갈등이 이러한 힘을 가지는 까닭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정치적 분화양식’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전제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지역갈등 중에서도 ‘삼국형’ 지역갈등에서 시원된 ‘영·호남갈등’의 역사적 재생산과정과

1) 이이화, 「한국의 파벌」 (서울: 어문각, 1983); 남영신, 「지역패권주의와 한국」 (서울: 새문사, 1991) 참조.

성격을 진단한 연구가 많은 관심을 모은다.²⁾ 이처럼 지역갈등의 ‘공간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지역불균형의 역사성을 부각시키는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 이 분야 연구의 새로운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지역감정·지역갈등의 역사를 밝히기 위해 흔히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문헌기록이나 俗說 등이 자주 인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런데 문헌기록과 속설 등은 대개 특정지역이나 지역민에 대한 기록자 개인의 편견과 억측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문헌기록과 속설 등의 내용을 들춰내면서 개인적 가치관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줄곧 인용되어 왔다. 예컨대 조선조 지방특성에 대한 관변측 문헌과 특정 지식인의 지방풍속과 인심에 대한 언급이나 속설 등은 뚜렷한 근거나 합리적 인식과는 무관한 풍수지리설, 풍문 또는 도참설에 기대어 지방적 편견을 과장하고 유폐시키는 진원지가 되었다. 특히 전근대 전통시대로부터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풍수지리설은 그것의 진위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배층이나 지식인의 해석에 의해 보편적 신념으로 자리잡아 왔던 것이다.³⁾

-
- 2) 조명래는 한국사에서 특정한 공간 수준에서 지역 단위의 정치적 과정으로 대내적으로는 쉽게 통일되면서 대외적으로는 타지역의 정치공간과는 상대화되는 ‘정치적 지역주의’가 삼국시대에 생성된 이래, 이러한 지역주의가 주요한 분파메커니즘으로 작용되는 역사적 계기를 거쳐 마침내 조선중기에 호남세력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제도화되면서부터 지역주의 분파적 갈등은 본격화되었다고 한다. 조명래, “영호남 갈등의 사적 유물론적 고찰,” 「지역불균형연구」(서울: 한울, 1994), pp. 20~21.
- 3) 이른바 車峴(차령산맥) 이남지역의 ‘背逆說’은 풍수지리설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 「고려사」, 권2, 태조 26년 4월.

전국 지방의 풍속과 인심을 서술한 문헌의 대부분이 전라도 지역의 풍속과 인심을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동국여지승람」,⁴⁾ 「택리지」,⁵⁾ 「임관정요」⁶⁾ 등에 기록된 바와 같이 전라도 지역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해 그후 이 지역민에 대한 편견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과 억측은 지배층의 왜곡된 인식일 뿐이다. 대부분의 피지배층에게 있어서는 막연히 지배층이 유포한 편견을 일부 듣고 있는 경우는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일상적 생활영역에서 특정 지역·지역민에 대한 왜곡된 감정이 인식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억측과 편견을 일제가 의병운동과 반일항쟁이 가장 치열했던 호남지역을 철저히 억압·배제하고 식민통치의 효율성을 위해 기정사실화하여 지역감정과 편견을 더욱 조장시킨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전라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나 예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전라도를 ‘충의지향’으로 평한 예에서나, 문운을 숭상한 정조가 호남을 ‘最名賢節義之鄉’으로 유시한 사례에서 이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⁷⁾ 이와 달리 영남 지방은 영조 이후 중앙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한때 반역항으로 배척되기도 했던 지역으로, 중앙으로부터의 배제와 차별대우가 호남과 크게

4) 1486년(성종17년) 사료수집을 바탕으로 편찬한 인문지리서로 전국의 지방적 특성에 대한 통치층의 대민관이 반영되어 있다.

5) 李重煥은 「擇里志」 <卜居總論> 人心條에서 평안도, 경상도와는 달리 전라도에 대해 부정적 평을 내렸다.

6) 順菴 안정복은 「臨官政要」 <風俗章>에서 영남 풍속에 대해서는 호평을, 호남 풍속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했다.

7) 호남학회, 「호남학보」, 권6, 1908, p. 333.

다를 바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⁸⁾

이렇듯 어떤 지역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인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문헌이나 지식인의 개인적 평가에 의해 한 지역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화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⁹⁾ 지방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형성된 문화와 풍속은 다른 지역민에게는 생소함과 이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나, 특정한 지방의 풍속과 개성은 ‘좋고 나쁘다’는 식의 호오감으로 평가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근대 전통시대에 발생한 미미한 정도의 소외의식은 그 시대의 범주 내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오늘날의 정치사회적 현실과 결부하여 과장되거나 왜곡시켜서는 곤란하다. 이런 점에서 지역 차별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방법론적으로는 진지한 접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대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결여한 데에 따른 과장된 이해방식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전근대 전통시대의 관변 문헌과 특정 지식인의 지방적 편견과 억측을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지배층의 인식을 그 시대의 보편화된 인식으로 전제하고 접근하는 오류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역갈등의 역사적 접근법의 한계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편견과 억측에 뿌리를 둔 지역감정의 발생 계기를 한민족의 역사형성의 과정으로부터 소급하여 접근하는 방식은 그러한 편견과 억측 즉, 지역감정을 근대화와 더불어 산업화시대의 고유한 산물

8) 「영조실록」, 권53, 17년 정월 壬申條.

9) 이병휴, “지역갈등의 역사,” 「지역감정연구」 (서울: 학민사, 1991), p. 112.

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데에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지역감정의 ‘역사성’의 강조가 우세집단이 열세집단에 대한 편견에 모종의 근거가 있는 것처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지역감정의 ‘역사성’의 지나친 강조는 우리 사회에서 지역감정 해결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2. 지역격차와 지역갈등

가. 경제적 격차와 지역갈등

1960년대 이래 본격적으로 추진된 경제개발전략은 공업화를 중심으로 하는 성장위주의 정책이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제개발논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이른바 ‘불균형성장이론’(unbalanced growth theory)¹⁰⁾과 ‘성장거점이론’(growth pole theory)¹¹⁾은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켜 많은 부작용을 동반하였다.

국가주도적 산업화전략은 부존자원, 자본, 기술, 산업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산업화를 추진해야 했기 때문에 불균형성장

10) A. O. Hirshma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8); A. O. Hirshman, *Voice, Exit, Voice, and Loyal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11) P. F. Perroux, "Economic Space," Theory and Applications, i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LXIV, 1950, S. pp. 89~104.

론에 입각한 산업화 전략이 불가피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수도권 중심의 집중적 발전과 서울-부산을 잇는 동남권·영남권의 활발한 산업화와 이와 대조적으로 서남권·호남권의 상대적 낙후현상을 초래하였다. 성장거점론은 산업입지의 조건이라는 국토 지리적 측면을 고려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고려를 경제적 요구에 우선시킴으로써 지역간 분배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발전과정 속에서 경제성장의 수혜지역·피해지역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엘리트 배출구조도 왜곡되어 특정지역 출신들에 의한 상대적 독점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서 경제발전의 지역격차와 더불어 엘리트 층원과정에서의 지역차별이라는 이중적 차별현상이 구조화되었다. 제3공화국 시대로부터 5공·6공시대까지 특정지역 출신들이 통치구조를 장악한 결과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지역격차와 지역차별현상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자료를 통해 지역차별의 현실을 간략히 살펴보자. 1988년의 6공시대 「국회지역감정해소특별위원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대기업의 임원의 출신도별 분포는 다음의 <표 1>에서와 같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원들의 출신지를 살펴볼 때, 서울이 37.8%로 수위를 점하고 다음으로는 경남 15.4%, 경북 11.7%, 충남 7.0%, 경기 6.7% 그리고 전남 3.5%, 전북 2.8%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호남과 영남의 점유율을 비교하면, 호남은

6.3%(50명)로 영남의 27.1%(214명)의 4분의 1에도 못미친다. 이처럼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은, 인구비율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경제적 영향력을 지닌 대기업 내부의 인적 구성에서도 여실히 반영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표 3> 1백개 대기업 임원의 출신도별 분포

출신도	임원수	비율(%)
서울	229	37.8
부산	44	5.6
경기	53	6.7
강원	53	3.7
충북	22	2.8
충남	55	7.0
전북	22	2.8
전남	28	3.57
경북	92	11.7
경남	122	15.4
제주	9	1.1
이북	15	1.9
계	790	100.0

출처: 상공부, 「국회지역감정해소특별위원회 요구자료 I」 pp. 19~22에서 재작성; 최원규, “경제개발의 격차와 지역감정,” 「지역감정연구」(서울: 학민사, 1991) 재인용.

민간기업에서의 인사상의 차별성을 밝힘으로써 지역간 경제적 차의 현실을 지적하였는데, 이를 공공부문이라 할 수 있는 상공부 산하 단체의 임직원의 출신지역별 비율을 검토해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¹²⁾ 상공부 산하 단체들은 경제개발과정에서 창출된 자원과 가치의 배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상공부가 「국회지역감정해소특별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하 단체들의 대표자 및 상근임원의 출신지역으로는 서울과 경북이 각각 10.9%로 수위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충남 11.2%, 전남 9.4%, 경남 7.5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10개 단체의 회장(이사장, 원장) 비율을 보면 대구·경북 37.5%, 서울 18.8%, 전남 12.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¹³⁾ 회장단의 점유율을 통해 상공부 산하 단체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세력은 대구·경북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지역격차는 민간경제 부분에서나 국가재정투·융자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적 차별화로 인해 호남지역 사람들에게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제3공화국 이래 우리 사회의 지역편중적 발전과정과 함께 영남지역의 상대적 발전을 주장하는 논리를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12) 상공부 산하 단체로는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수출산업공단,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기계공업진흥회 등이 있다.

13) 상공부, 「국회지역감정해소특위 요구자료 I」 (서울: 상공부, 1988), p. 27.

흥미있는 반응이 제기되어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영남에 거주하는 지역민들 특히 부산지역에서는 김영삼 문민정부를 창출한 지역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혜 즉, 경제적 혜택과는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혜택의 측면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¹⁴⁾ 이런 점에서는 대구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구 시민들은 제3공화국 이래 이른바 대구·경북지역의 패권주의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소수의 특권적 엘리트층을 제외하고는 이 지역 주민의 대다수는 발전의 수혜과정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¹⁵⁾ 특히 대구 시민들은 '92년도와 '93년도의 경우 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경제발전 과정에서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낙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각 시·도에서 일년간 창출된 부가가치액으로, 특정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받은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등 지역간 이전소득은 지역내총생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지역내총생산을 비교할 경우 부산을 비롯한 인천·대구·광주·대전 지역 등은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경남·경기·경북·전남·충남 등의 총생산과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1인당 지역내

14) 부산 지역의 한 현장르포기사를 통해 김영삼 문민정부에 대한 비판과 지지거부라는 민심이반현상을 엿볼 수 있다. 「시사저널」, 95. 1. 12 참조.

15) “대구의 민심기행,” 「사회평론 길」, 1994. 7 참조.

총생산에서 경남이 수위를 달리고 경북의 순위가 비교적 높은 까닭은 경남지역은 울산, 마산·창원 등 우리 나라 최대의 산업지를, 경북지역은 포항, 구미 등의 산업지를 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내총생산 규모에서 부산, 대구지역이 하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부산, 대구의 많은 산업체들이 입지조건상 유리한 인접지역인 경남, 경북지역으로 이전한 데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표가 곧 지역의 경제발전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특정 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해서 그 지역민의 소득수준이 가장 낮다는 것으로 주장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지역민의 생활수준 즉, 삶의 질을 비교하는 데에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표와 함께 사회경제적, 복지수준, 여가생활 및 환경지표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근년 통계청에서 펴낸 「지역통계연보」의 다양한 지표 가운데 다음의 <표 4>에서와 같이 「지역내총생액」 지표를 비롯하여 「금융저축액」, 「은행예금」, 「재정자립도」, 「의료기관종사자 의사수」, 「승용차수」, 그리고 여가생활의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영화관람횟수」 등 다양한 지표의 검토를 통해 전국 각 지역의 생활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93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비교해 보면 서울 6,542(단위: 천원), 부산 4,950, 대구 4,647, 인천 6,467, 광주 5,073, 대전 5,657, 경기 6,228, 강원 4,876, 충북 6,085, 충남 5,392, 전북 4,945, 전남 6,107, 경북 6,288, 경남 8,025, 제주 4,977로 나타났으며, 대구

지역이 '92년도에 연이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산지역도 대구에 이어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 인천, 경기, 충북, 전남, 경북, 경남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은 전국평균(5,745천원)을 넘어섰다.

한편 「금융저축액(1인당)」 및 「은행예금(1인당)」 지표에 있어서는 서울에 이어 대구, 부산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특히 대구가 두 지표에서 모두 서울 다음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다음으로 「재정자립도」 지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의 수준 즉, 중앙-지방간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93년 및 '94년도 조사에 의한 재정자립도는 서울에 이어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 모두 70%를 상회하여 전국 차원(전국평균 '93년 54.2%, '94년 50.7%)에 서는 상위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의료기관종사 의사수(만명당)」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전국평균 7.77명('92년)·7.84명('93년)에 비해, 서울 13.5명·14.1명의 수위에 이어 광주 13.3명·12.6명, 대구 11.2명·11.5명, 대전 11.1명·11.1명 그리고 부산 10.0명·9.8명 순으로 나타났다. 「승용차수(만명당)」 지표에서는 '93년의 경우 전국평균 1,039.5(만명당)에 비해, 서울(1,388)에 이어 대구(1,334)가 2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대전(1,299), 경기(1,224), 인천(1,179), 광주(1,094), 강원(1,00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화생활의 척도를 반영하는 「영화관람횟수」를 나타내는 지표를 살펴보면, '94년도 한해동안 전국평균(0.84)에 비해 1인당 한편 이상의 영화를 관람한 경우는 서울(2.0)에 이어 대

구(1.7), 부산(1.6), 광주(1.3), 대전(1.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두드러진 특징으로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표에서 서울이 항상 수위를 차지하는 것은 경제집중력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소비생활 및 문화생활 등의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서울중심적 발전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낙후상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비롯하여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소득의 실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금융저축액」, 「은행예금」 등의 지표에서는 서울에 이어 부산과 대구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은 소비생활의 한 척도로 볼 수 있는 「승용차수」 지표에서나 문화생활의 한 척도인 「영화관람횟수」 지표에서도 타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지역별 주요 지표

	GRDP (천원)		금융저축액 (1인당)	은행예금 (1인당)	재정자립도 (%)		승용차수 (만명당)		의료기관종사 의사수(만명당)		영화관람횟수 (1인당 회년)	
	'92	'93	'93(백만원)	'94(천원)	'93	'94	'92	'93	'92	'93	'93	'94
서울	5,762	6,542	30.3	6,366.2	85.8	86.3	1,261.4	1,388	13.5	14.1	2.1	2.0
부산	4,457	4,950	9.0	2,577.8	72.7	70.1	817.2	939	10.0	9.8	1.7	1.6
대구	4,180	4,647	9.2	2,940.0	76.8	71.7	1,167.3	1,334	11.2	11.5	1.9	1.7
인천	6,116	6,467	6.4	2,304.8	74.7	76.7	1,026.4	1,179	6.5	6.4	0.7	0.8
광주	4,504	5,073	8.4	2,382.6	48.5	50.0	912.0	1,064	13.3	12.6	1.5	1.3
대전	5,151	5,657	8.5	2,333.5	64.2	62.6	1,168.4	1,299	11.1	11.1	1.1	1.0
경기	5,740	6,228	4.7	1,973.5	71.2	67.1	1,011.3	1,224	5.0	5.2	0.7	0.7
강원	4,444	4,876	5.2	1,529.3	38.8	32.2	844.5	1,009	7.8	7.6	0.9	0.8
충북	5,245	6,085	5.3	1,427.4	40.7	37.0	816.0	976	6.1	6.3	0.2	0.3
충남	4,605	5,392	4.3	1,225.8	36.5	30.7	619.1	802	4.6	5.7	0.2	0.2
전북	4,420	4,945	5.4	1,477.7	35.1	30.6	687.1	829	8.1	7.8	0.2	0.2
전남	5,235	6,107	4.1	1,042.4	28.5	23.2	422.6	594	4.0	4.4	0.1	0.1
경북	5,752	6,288	5.0	1,412.1	36.8	33.0	822.7	997	5.0	4.5	0.1	0.1
경남	7,894	8,025	5.8	1,767.2	55.3	48.4	900.0	1,082	5.7	5.6	0.8	0.7
제주	4,553	4,977	7.4	1,893.3	48.1	42.5	877.5	1,057	4.6	5.1	0.8	1.1
전국	5,204	5,745	7.9	2,176.9	54.2	50.7	890.2 1,039.5		7.77	7.84	0.87	0.84

자료: 「지역통계연보」(서울: 통계청, 1994, 1995) 재구성.

나. 엘리트 층원과정과 지역갈등

국가주도적 산업화전략과 관련하여 통치세력은 정치적 정통성의 기반을 충성과 신뢰에 기반한 '私的緣故'(personal networks)를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구조 역시 왜곡

될 수밖에 없었다. 지역균열의 정치과정에 따른 한국사회의 정치균열에 관한 한 연구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권력기구 및 사회적 지배기구의 인적 구성이 지역적 범주에 따라 획일적 경향을 띠고 구조화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정치·군·경제 및 언론계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영남지역 출신이 지배엘리트 지위를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반면, 호남 출신과 강원 출신은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

제3공화국 시대 이래 지배엘리트의 영남편중 현상이 점차로 심화되어 오다가 제5공화국 정권에 들어와 강화되었으며, 마침내 영남지역 내에서도 대구·경북지역 출신을 지칭하는 이른바 「TK사단」이 한층 외재화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제6공화국에 들어서 는 ‘광주사태’ 문제, 낮은 지지율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침체화된 지역감정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정권출범 초기에는 정부각료를 비롯한 사법부의 고위직에 외형적인 지역안배가 어느 정도 이

16) 대통령을 중심으로 권력의 배분과 행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장관직의 경우, 3공시대와 5공시대의 영남출신의 평균 36.1%의 점유율은 6공시대에서도 비슷한 비율로 유지되고 있다.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관료직에도 영남출신이 28%로 단연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국정최고책임자이자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과 경호실의 참모들도 영남출신이 압도적 비율로 점하고 있다. 또한 권력창출의 배경이자 기반인 군의 경우, 영남중심의 집단세력화가 확연히 드러난다. 육군참모총장은 5공과 6공 하에서는 전원 영남출신으로 이루어졌고 군장성도 영남출신이 무려 44%를 차지하고 있다. 군 상층부의 출신지역별 분포는 집권세력의 쿠데타과정에서의 동반세력 중심으로 지역연고에 따른 지역적 구조화 현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 한편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사의 경우에도 상층부의 인적 구성은 여타 부문의 지배구조와 거의 유사성을 띤다. 김만홍, “제6공화국과 지역감정의 심화,” 「지역감정연구」 참조.

루어진 듯했다. 그러나 1989년 후반에 들어서는 기존의 지역편중 현상이 재현되면서 핵심권력부문에서 다시 「TK사단」이 「軍-官-財-學-言복합체」를 연상할 만큼 거대한 ‘파워커넥션’을 형성하면서 다시 지역불균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된다.¹⁷⁾

한편 전통적으로 호남지역 출신의 배출비율이 높은 사법엘리트의 충원에 있어서도 제3공화국 이래 영남 출신의 신장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출생지에 따라 공화국별 사법엘리트의 충원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이 나타난다. 이 가운데 특징적 현상으로는 서울출신은 제2공화국을 고비로 그 비율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영남은 제3공화국 이래 뚜렷한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제5공화국 아래서 비약적인 증가 추세와 더불어 제6공화국에 들어서는 43%를 차지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제5·6공 시대에 와서 지역별 사법엘리트의 구성비는 영남권에서 단연 우위를 점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호남지역은 사법엘리트의 배출과정에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증감추세에 있어서는 뚜렷한 변화를 발견하기 어렵다. 호남권의 사법엘리트의 배출은 다른 부분의 엘리트 배출에 비해 높은 비율의 지속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 분야의 엘리트 증가추세는 영남권의 증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북출신은 제1공화국과 제3공화국 시대에 걸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그후의 급격한 감소현상은 고령화로 인한 자연적인 퇴장현상으로 이해된다.

17) 「한국일보」, 1989. 1. 8 참조.

<표 5> 공화국별 사법엘리트의 출생배경

(단위:%)

출생지	공화국별 사법 엘리트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제6공화국초
서울	15	29	6	7	4	0
영남	20	0	29	11	37	43
경가강원	0	29	0	14	12	7
충청	15	14	0	21	21	17
호남	20	29	29	29	21	30
이북	30	0	35	7	5	3
합계	100	101	99	99	100	100

출처: 안병만, “한국의 파위 엘리트 연구,”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정치」, (서울: 법문사, 1993) 참조.

핵심적 파위엘리트 즉, 국가운영 방향과 중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소수의 경제엘리트 및 정치권력적 엘리트의 출생배경에 대한 이해는 어느 면에서 우리 사회의 지역차별 현상을 파악하는데에 관건적인 문제가 된다.¹⁸⁾ 핵심적 파위 엘리트들의 출생배경, 교육배경 및 경력 등은 엘리트 충원배경의 중요한 지표가 됨을 물론이다. 이 가운데 전문적 엘리트와 정치권력적 엘리트를 포함하는 제6공화국의 핵심적 파위엘리트들을 그들의 출생배경에 따

18) 핵심적 파위엘리트를 경제엘리트와 정치권력적 엘리트로 구분한다면, 전자는 전문성이 강한 5대 경제부처 장관(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농수산부·동력자원부 장관)으로 한정되고, 후자는 일반 정치적 성격이 강한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대표인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 국가안전기획부,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총칭한다.

라 분류한 다음 <표 6>을 살펴보자.

출신지역별로 핵심적 파워엘리트를 살펴보면, 먼저 경제엘리트의 경우 서울 출신이 26.3%, 경기·강원 출신이 31.5%를 차지해 전체의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나, 정치권력적 엘리트의 비율은 서울 출신이 전무한 상태에서 경기·강원 출신만 5.8%를 점하고 있다. 호남지역 출신은 경제엘리트로서 상당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으나 정치권력적 엘리트의 영역에서는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 처하고 있다. 이와 달리 영남지역 출신은 경제엘리트의 배출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나 정치권력적 엘리트의 경우 58.9%나 차지해 권력엘리트의 배출통로를 거의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심적 파워엘리트 가운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제엘리트는 상대적으로 고른 지역적 편재성을 통해 지역차별의 수준이 보다 덜 심각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나, 권력엘리트의 경우 영남지역의 獨占構造가 확연히 드러나면서 지역적 불균형의 심각성을 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공화국별 행정엘리트 충원과정에서도 예외없이 영남지역 출신의 절대적 우위에 의한 지역차별 현상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¹⁹⁾

19) 정치엘리트 충원과정에서 서울출신은 제1공화국 시기에 가장 많은 비율(23%)을 차지했으나, 그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제6공화국 초기에 다시 다소 상승(17%)한다. 영남지역의 행정엘리트는 제1·2공화국 시기의 21%의 점유율로부터 점차 상승하여 제5공화국의 43% 및 제6공화국 초기의 41%에 이르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제5·6공 시기의 행정엘리트의 영남지역 출신 점유율은 이 시기의 경기·강원, 충청, 호남지역 등 3단위의 지역출신의 행정엘리트를 합한 비율(제5공 시기의 39%:43%, 제6공 시기의 35%:41%)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 밖의 경기·강원, 충청, 호남지역 출신의 행정엘리트 배출과정에서 특징적인

<표 6> 6공화국 핵심적 파워엘리트의 출생배경

(단위: %)

출생배경	경제부처장관 (경제엘리트)	주요 기관장 (정치엘리트)	전 체
서울	26.3	0	13.9
경기·강원	31.5	5.8	19.4
충청	5.2	5.8	5.5
호남	21.0	0	11.1
영남	10.5	58.9	33.3
이북	5.2	29.4	16.7
합 계	100	100	100

출처: 안병만, “한국의 파워 엘리트 연구,” 참조(핵심적 파워 엘리트 충원배경의 연구대상 시기는 제6공화국이 출범한 1988년 2월부터 1992년 1월까지의 시기에 해당됨).

엘리트 충원에서 지역격차의 원인으로, 조직이론에서 사용되는 ‘불확정성’이라는 개념을 정교화하여 ‘미시적 동기와 의도되지 않은 거시적 결과’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엘리트 충원상의 격차를 설명하기도 한다.²⁰⁾ 이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제3공화국 이래

변화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영남지역 출신의 행정엘리트의 상대적 증가 추세와는 뚜렷이 대비되는 측면이다. 안병만, “한국의 파워 엘리트 연구,”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정치」 (서울: 법문사, 1993) 참조.

20) K. Giddens, Knorr-Cetina and A. V. Cicourel, Anthony, “Agency, Institution and Time-Space Analysis,” pp. 161~174, *Advances in Social Theory and Methodology: Toward an Intergration of Micro and Macro Sociologie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1); Boudon and Raymond,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Social Action*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81).

지연을 중심으로 한 인사정책은 국가조직 내부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미시적 동기에서 연유된 것으로, 이미 문화적으로 연고의식이 전통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사회에서 지배층의 사적 연고에 의한 통제기반의 확립은 정통성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합리적 선택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²¹⁾ 다시말해 통치기반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사적 연고를 가진 사람들을 충원하는 전략적 선택을 함으로써 외부 환경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통제가능한 영역으로 들여와 거래비용을 줄이고 통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적 연고가 강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엘리트의 지역적 편중 현상은 이러한 미시적 동기가 누적되어 의도되지 않은 거시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역격차와 지역차별이 지역갈등으로 까지 발전하게 되는 원인과 과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지역갈등 구조가 전혀 변화되지 않는 현실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993년 2월에 출범한 김영삼정부의 권력엘리트의 출신배경에서도 지역차별 현상이 과거와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출범이후 최근까지 김영삼 문민정부는 60명의 장관(장관급 제외)과 62명의 차관(차관급 제외)을 배출하였는데, 장관 가운데 부산·경남 출신은 모두 14명으로 전체의 23.3%의 비율을 점하고 있으며, 차관 중에는 이 지역 출신이 13명으로 20.9%

21) 김용학, “엘리트 충원에 있어서의 지역격차,”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서울: 성원사, 1989) 참조.

를 차지하고 있다. 장·차관 모두 다른 지역 출신보다 부산·경남 등 이 지역 출신을 통칭하는 이른바 「PK 출신」이 가장 많다는 점이 새로운 현상으로 부각된다. 김영삼정부 출범초기에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호남출신 인사의 장·차관 기용이 눈에 띄었으나, 그후 곧 ‘능력우선’이라는 명분 아래 배제되기 시작하여 집권 중반기 이래 내각을 비롯한 장·차관 가운데 호남지역 출신은 겨우 손꼽을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²²⁾ 1995년 8월 현재 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출신지별 분포를 살펴보면 영남이 호남의 약 2.5배, 충청의 약 3.5배, 경기·인천의 약 5배에 달하여 지역편중인사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²³⁾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지역차별 및 엘리트 충원과정과 관련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제3공화국 이래 제5공·6공을 거치면서 인사편중과 엘리트 충원구조가 더욱 왜곡되어 왔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김영삼 문민정부에 와서도 지역연고에 의한 인사정책에 있어서는 과거 대구·경북 출신에 의해 독점되어 온 엘리트 배출통로가 부산·경남 출신으로 대체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 외에, 지역연고에 의한 인사정책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데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삼정권

22) '95년 9월 현재까지 장관의 경우 충남 16.6%(10명), 서울 13.3%(8명) 순으로 나타났고, 차관은 서울 20.9%(13명)로 부산·경남 지역출신과 동률이며 다음이 경북 15.5%(9명) 순이다. 「한겨레21」, 제77호 (1995. 9. 28) 참조.

23) 지역편중과 함께 권력의 핵심부처의 장은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제177회 정기국회('95. 10. 4)국정감사(행정위원회보도자료) 참조.

이 출범초기 혁신적이고 지속적인 인사탕평책을 통해 지역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면 문민정부의 정통성을 더욱 확고해지고 전국적 차원에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참된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민족사의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엘리트 층원상의 지역격차는 지역감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사회학회가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결과도 예외없이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지역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호남 사람들은 우선 정부의 차별정책을 꼽고(49%), 다음으로 정부의 인사정책을 지적하여(16.7%) 영남인에 편중된 불공정한 인사정책이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민감한 문제임을 드러냈다. 반면, 지역갈등에 대한 영남 사람들의 인식은 호남인들과는 무척 대조적이다. 영남인들은 지역갈등의 주원인을 지역주민간의 편견(31.0%), 정치인의 선거운동(29.1%), 정부의 경제발전정책(16.5%) 등으로 꼽고, 인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는 겨우 6.1%에 불과한 반응도를 보였다.²⁴⁾ 이처럼 영호남인들 사이에서 지역갈등의 주요 원인에 대해 상당한 견해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 사회의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하겠다.

24) 「한국일보」, 1989. 1. 1.

3. 정치과정과 지역주의

내 땅 까마귀는 겁어도 귀엽다거나 까마귀도 내 땅 까마귀면 반갑다는 속담이 지역감정을 부채질하는 데에 원용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고향 까마귀를 귀엽게 여기거나 반가와하는 것은 사람의 자연스런 본성에서 우러나는 것이며 지역감정과는 큰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망국적 지역감정의 뿌리를 뽑자는 말은 고향 까마귀를 귀엽고 반갑게 여기는 감정까지 버리라는 뜻은 아니다. 지역감정과 지역사랑은 전혀 별개의 용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노출된 적나라한 지역감정의 문제는 사람사랑이나 겨레사랑, 고향인 사랑과는 달리 비합리, 불균형, 차별 등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원시적 감정의 표출이다. 그래서 이를 말끔히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반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절망론으로 이어지게 된다.²⁵⁾

가. 선거와 지역주의

지역감정이 정치과정에 결부될 때, 지역간 대립과 반목은 한층 첨예화되고, 이 대립과 반목은 다시 정책에 반영되는 악순환을 겪는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잠재화된 상태의 지역감정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당하게 됨으로써 지역갈등은 상호배타적이고 투쟁적

25) 『동아일보』, 1988. 6. 25.

형태로 표출된다. 제3공화국에서부터 제5공·6공정권 그리고 김영삼정부가 창출되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은 지역감정을 이용함으로써 정권창출과 권력연장의 유력한 수단으로 삼았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적 발전에 따른 고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 발전에 조응하는 계급·계층의 분화과정이 고도화되지 못했다. 이는 어느 면에서 ‘압축성장’의 결과에 의해 사회발전의 템포와 계급적 분화가 상관성을 지닐 수 없었던 측면에서 일단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동족상잔이라는 전쟁경험과 그후 고착화된 분단구조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 전반에 침윤된 레드콤플렉스와 반공문화에 의해 오랜 시기 동안 계급적 인식이 철저히 봉인당한 상태에서 사회적 발전에 조응하는 계급적 분화현상이 나타날 수는 없었다. 그 결과 정치영역에서는 특정 계급·계층 또는 특정집단을 지지기반으로 삼는 전략을 수립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정치세력간에는 상호 배타적·독점적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으로 대개의 경우 자신의 사적 연고에서 비롯된 지역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정치세력의 지지기반을 특정 지역에 둘 수밖에 없었던 점은 한국 정치 과정의 특수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²⁶⁾ 어쨌

26) 한국정치에서 최초의 지역주의 성향의 투표행태는 1967년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났다. 당시 선거의 지역적 분포를 ‘남북현상’으로 지칭하였듯이 연고지역에 대한 지지성향이 뚜렷이 부각된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남지역의 높은 지지경향은 정치적 후원자·수혜자(patron-client relation) 관계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그후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영·호남 균열현상은 「수혜지역=여당후보연고지=영남」대 「피해지역=야당후보지역=호남」의 구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김만흠, “한국의 정치균열에 관한 연구: 지역균열의 정치과정에 대한 구

든 지역주의 투표행태와 선거과정은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영·호남의 지역균열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수혜지역(여당후보연고지) 대 소외지역(야당후보연고지)이라는 정치적 갈등과 경쟁이 중첩된 전형적인 정치대결의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국정치 과정에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지배권력블록이 기존의 반공주의와 자본주의적 발전주의라는 핵심적 이데올로기의 동원만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특정한 조건이 형성될 때 지배권력블록측에서 지역감정을 동원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동원된 지역감정은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의 한 유형으로 전환되었다.²⁷⁾ 이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13대 대통령선거(1987.12.16)를 들 수 있다.

13대 대통령선거시기에는 투표행위 이전의 선거과정에서부터 지역감정 내지 지역갈등이 첨예하게 부각되었다. 그중 하나는 13대 대선이 1980년 ‘광주사태’를 통해 호남지역의 집단적 피해의식과 한을 남긴 채 집권한 신군부세력에 대한 심판의 계기로 인식되었으며, 특히 대선은 호남인에게 있어서는 곧바로 지역문제와 연결되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한 측면은 정치세력 및 정당체제가 이미 지역균열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선과 그 다음해의 총선은 지역할거주의에 기반한 지역분할구도로 재확립되면서 극한적 지역감정이 표출되어 대립과 상호불신 풍조

조적 접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1. 8) 참조.

27) 최장집, “지역의식 무엇이 문제인가,” 『동향과 전망』, 창간호 (서울: 한국사회연구소, 1988) 참조.

를 만연시키고 말았다.

14대 대통령선거는 지역감정이 극성을 부렸던 '87년의 13대 대선에 비해 겉으로는 지역감정이 다소 누그러진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특정후보지원을 위한 집권여당과 지방행정권력의 담합을 통해 '지역감정부추기기'가 폭로됨으로써 정치권력이 주된 선거전략으로 지역감정을 이용하는 전략이 비록 과거에 비해 난폭한 형태로 표출되지 않았을 뿐 여전히 효과적인 선거전략으로 채택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²⁸⁾

대선 이후 한국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92.12.21)에 따르면 새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안정'이 61.4%로 수위를 나타냈으나, '지역감정완화'가 13.9%를 차지해 다음으로 꼽혔다. 그리고 과감한 개혁 9.7%, '야당과의 관계개선' 6.1%, 선거사범처리 등 '선거후유증수습' 3.2%, '반대표의 의미수용' 2.4% 순으로 각각 집계되었다. 여기서 경제안정에 대한 국민적 여망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요청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지역감정해소에 대한 바람이 단연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지역감정이 개혁에 대한 요구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지역정서' 또는 지역감정의 혼탁상을 해결하지 않고는 성공적인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회적

28) 야당의 도청에 의해 이른바 '부산기관장모임'이 폭로되었으나, 도청·폭로사건은 오히려 지역의 유권자들을 긴장시키고 뭉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선거 이후 정치적 공방이 '지역감정부추기기'를 선거전략으로 모의한 기관장모임의 비도덕성보다 도청의 위법성에 초점이 맞춰짐으로써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조사에서는 또한 지역감정 심화여부와 관련하여 선거후 지역감정이 ‘완화됐다’고 보는 응답자는 38.8%에 달한 반면, ‘더 심화’에 대한 응답이 36.6%, ‘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23.1%로 각각 집계되었다. 지역에 따라 <표 5>에서와 같이 ‘완화됐다’는 응답은 제주 55.0%, 전남 54.2%, 대구 51.15%, 부산 46.5% 순으로 나타났으며, ‘심화됐다’고 답한 응답자는 광주 64.4%, 충북 52.0%, 전북 47.4%, 전남 41.3%, 부산 40.4% 등의 분포를 보였다. 과거에 비해 지역감정이 ‘더 심화’되었다는 반응과 ‘전과 비슷하다’고 하여 지역감정이 여전하다는 반응을 합한 비율(61.9%)은 ‘완화됐다’고 보는 응답자의 비율(38.8%)을 훨씬 상회했다.

<표 7> '92 대선과 지역감정 심화여부

지역 완화·심화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전북	충북	제주
“완화됐다”	46.5	51.15	□	54.2	□	□	55.0
“심화됐다”	40.4	□	64.4	41.3	47.4	52.0	□

출처: “「한국일보」-미디어리서치 대선이후여론조사,” 「한국일보」, 1992. 12. 21 재구성.

주: ‘□’는 신문보도에서 언급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나. 지역이데올로기와 지역분할구도

한국정치에서 지역주의 성향의 투표행태는 최근의 지자체선거

(1995.6.27)에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다시 주목된다. 한국정치 과정에서 매 단계의 선거국면마다 고개를 드는 지역주의 성향은 '95년도의 지방선거에서 뚜렷한 지역이데올로기로 작용했다. 우리 사회의 지역주의와 관련하여 '95년도의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은 집권여당을 비롯하여 전통적으로 지역감정의 피해자였던 야당측에서도 모두 지역감정을 지역이데올로기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이다.²⁹⁾

1995년도의 지방선거는 지역분할구도를 부활시켰다. 지역분할구도가 재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지적해보면 첫째, 사회주의권의 붕괴·몰락으로 이념 문제는 선거형태의 정치투쟁의 장에서 더 이상 중심적인 이슈로 자리잡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전통적으로 야당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었던 반공이데올로기 즉, '색깔론'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동원되지 않았다. 지방선거나 총선의 경우는 대통령선거와는 달리 정치체제의 성격과 지배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치투쟁의 형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반공문화구조의 근저에 자리잡은 레드콤플렉스를 동원할 만큼 지배권력블록측의 절박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대선이나 총선 또는 지방선거라는 정치투쟁의 형태의 차이보다는 반공문화구조가 점차 해체되어 가는 과정에서

29) 선거과정에서 주장 또는 비판된 '지역할거주의,' '지역패권주의,' '지역등권론,' 등은 지역감정이 지역이데올로기와 같은 하위(sub)이념체계로 까지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체제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수단으로 더 이상 '색깔론'의 효용성이 보장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세계적 차원에서 이념적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 아직 남북관계에서 화해·협력을 통한 공존·공생의 토대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에 의한 전쟁도발가능성을 상기시키거나 위기감의 조성 등에 의해 북한경계의식이나 '반북의식'이 새로운 하위이데올로기로 작동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 향후 다음 단계의 선거국면에서 상대방후보에 대한 이념공세는 이전과 같은 힘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선거쟁점이 뚜렷이 떠오르지 못한 가운데, 지역발전 문제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어 소외·차별의식을 갖고 있던 호남·충청·강원도 지역에서 지역감정이 쉽게 수용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특정지역의 정치적 헤게모니에 대한 잠재되었던 불만이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지역민들에게 지역주의적 선택을 하도록 했던 것이다.

셋째, 정치지형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김영삼정권의 중간평가의 성격을 띤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지형의 새로운 형태로 지역분할구도에 있어서 영남지역이 뚜렷이 양분됨으로써 1992년의 대선에서 보여주었던 균열상보다 한층 복잡한 양상을 드러냈다. 부산·경남지역과 대구·경북지역으로 양분된 영남지역의 균열은 지난 30여년 동안 군부권위주의정권의 창출과 그러한 기반을 통해 정치엘리트층의 배출통로를 상대적으로 독점해 왔던 대구·

경북지역이 김영삼정권의 등장과 함께 이 지역 출신의 소수 정치 엘리트들에 대한 배제를 이 지역주민 전체에 대한 배제와 소외의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김영삼정권이 과거의 영광과 지역주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정치영역에서 엘리트 배출 통로의 상대적 독점을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하여 대구·경북지역과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은 선거과정을 통해 김영삼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과 맹목적인 지지로 갈라서면서 영남지역을 하나로 묶어내는 결합력의 창출을 기대할 수 없었다. 여기에다 호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형태이나, 충청 및 강원지역의 소외와 배제의식으로 인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지역에 기반한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주장하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수용되면서, 여·여당 정치세력이 분점하는 서울을 일단 예외로 한다면, 2분된 영남, 호남 및 충청·강원지역으로 한국의 정치지도가 4등분되는 형국이 초래되었다.

넷째,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엇보다 가장 주목되는 현상은 지금까지 지역주의의 최대의 피해자였던 야당진영이 집권여당의 ‘지역패권주의’를 비판하고 ‘지역등권론’을 주장함으로써 지역주의에 대해 전통적으로 수세적·방어적이었던 입장에서부터 지역주의를 적극적·공세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을 새로운 변화로 꼽을 수 있다.³⁰⁾ 그리하여 야당은 호남지역의 절대적 지지와 서울·경기지역

30) 지역분할구도에 편승한 선거전략은 1987년의 대선국면에서 김대중 후보측의 ‘4자필승론’에 이미 반영된 바 있다. 비록 ‘색깔론’의 망령과 관련.

에서 호남연고를 가진 유권자들의 적극적 지지를 기반으로 지역주의에 편승한 전략을 채택했던 것이다.

‘지역등권론’은 절대 우위를 차지한 한 지역이 여러 지역을 수직적으로 지배하는 ‘지역패권주의’를 벗어나 모든 지역이 각자 제 목소리를 내면서 수평적으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주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지닌 일면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지역등권론’은 ‘지역할거주의’라는 비판을 극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역등권론’은 한편으로는 영남권을 공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호남권·충청권·강원권 등의 타지역의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정치적 결집을 부추기는 새로운 지역주의의 논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역패권주의’를 비판하면서 제기된 ‘지역등권론’은 오히려 지역적 정치균열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작용을 했다. 그러나 ‘지역패권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범지역적 연합을 강조하면서 전국적 차원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참다운 「국민정당론」을 주장했더라면 새로운 형태의 지역주의라는 비난을 극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서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을 이끄는 지도이념을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지역등권론’, ‘지역패권주의’, ‘지역할거주의’ 등은 모두 지역주의의 배

금권선거에 의해 대권문턱에서 좌절되고 말았지만, 다음 해의 총선에서 지역주민의 절대적 지지에 힘입어 정치적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지역분할구도에 편승한 선거전략을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역대 선거와 '95년도의 지방선거의 경우가 다른 점은 김대중 진영은 지역주의의 피해자이자 순교자였던 입장에서 스스로 지역주의를 불러내고 이를 활용하는 적극적·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했다는 데에 있다.

타적 응집력을 강조하여 정치적 득세를 도모하려 하는 논리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95년의 지방선거에서 지역주의가 크게 작용한 결과 여·야당 3당(민자당·민주당·자민련)의 텃밭은 일차적으로 지역연고에 따라 나누어졌다.³¹⁾ 한국갤럽이 투표자를 상대로 한 수 차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거초반의 여론조사에서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젊은층의 투표성향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거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지역주의가 연령층별 투표성향을 압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감정이 연령층별 투표성향을 압도한 것은 이번 선거의 한 특징임을 알 수 있다.³²⁾

지방선거의 정치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에서 지역주의가 극복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제의 참된 정착을 기대하는 것은

31) 충청지역에 지지기반을 가진 김종필의 집권여당으로부터의 축출은 충청지역 주민의 정치성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92년 총선 당시 충청지역에서 여당(민자당)은 40.1%라는 높은 지지를 받았으나 '95년 지방선거에서는 21.0%로 급전직하였다. 반면, '95년 지방선거에서 충청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자민련)은 이 지역 주민들의 소외의식과 자존심을 자극한 '햇바지론'에 의해 57.2%라는 몰표를 얻었다. 이러한 지지도는 '88년 총선 당시 이 지역에 기반한 정당(신민주공화당)의 41.5%의 득표율을 훨씬 웃도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대전·충남과는 달리 전통적인 여당지지 성향을 보여온 충북지역까지 지방선거에서 지역주의에 가세했다는 사실이 지역의 급변한 지역정서를 잘 말해준다. "득표율로 본 '6·27,'" 「조선일보」, 1995. 6. 29 참조.

32) 광역단체장을 비롯하여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철저한 지역분할구도가 형성되었다. 민자당은 부산·경남, 민주당은 수도권과 호남, 자민련은 충청권을 장악하면서 지역할거주의에 기반한 지역분할구도가 자리잡게 되었다. 경인지역의 투표성향도 결코 지역연고를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동아일보」, 1995. 6. 29 참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우는 지방자치제가 중앙정치의 논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4. 소결론

우리 사회의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역갈등의 역사성을 지나치게 부각시킴으로써 오히려 지역갈등을 무리하게 ‘발명’해내는 역기능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격차와 관련하여, 소외지역의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간 경제격차를 줄여나가는 한편, 민간경제 부문에서나 국가투·융자기관에서 지역차별화를 철폐시키는 정책적 차원의 결단이 요구되는 실정이라 하겠다. 셋째, 정치엘리트 충원과정의 사적 연고를 타파하고 인사정책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강조되어야 한다.³³⁾ 사적 연고, 특히 지연에 의한 엘리트 충원구조는 타파되어야 하며, 기회의 균등이 모든 지역출신에게 열려있어야 한다. 편견과 고정관념에 기반한 지역감정을 극복하려는 노력에 비해 지역격차의 해소와 인재등용과정 및 엘리트 충원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문제는 결코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다. 따라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올바른 문

33)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68.1%가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사정책의 공정성, 즉 엘리트 충원과정의 형평성을 통해 지역차별이 철폐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지역간 경제력 격차 해소에 대한 기대(76.2%)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한국일보」, 1989. 1. 1.

제인식과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

선거와 지역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서는, ‘지역망령’이 선거국면마다 부각되면서 우리사회의 합리적·이성적인 정치문화의 형성과정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지역감정·지역갈등에 기반한 지역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보다 깊이 각인된다면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공동체적 논리와 윤리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근대적 민족국가의 완결을 위한 민족통일의 과정에 커다란 걸림돌로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제Ⅳ장 지역주의 해소 방안: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 방안

1. 통일후 지역갈등 양상

우리 사회의 지역주의는 권위주의적 산업화 과정에서 차별과 소외 및 배제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단구조 아래서 계급·계층적 이해관계의 정치·사회적 표출이 근원적으로 봉쇄된 상태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적 갈등구조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 그후 지역주의는 권위주의적 정치행태를 벗어나 민주적 이행기에 들어선 단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과정에서 수 차례의 선거를 통해 지역주의가 한층 심화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을 경험했다.

우리 사회의 지역감정·지역갈등이 점차 극복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통일후에도 지역주의가 지속적으로 표출되는 현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다. 여기에다 통일후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차원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남북한 주민간 상호 불만이 증폭될 것이며, 이러한 혼란 상태를 틈타 선동적 정치가들이 지역감정을 자극하여 지역갈등과 지역주의를 부추길 수도 있다. 그리고 통일후 계층구조가 더욱 다양하게 분화되는 과정 속에서 중하층 계급의 이해와 욕구를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계급차별을 비판하는

정치세력에 의해 사회적 균열이 촉진되면서 특정 지역 중심으로 ‘분리주의적’ 운동이 나타나 지역갈등의 새로운 형태가 전개될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적 합의에 바탕을 둔 국민통합적 정책이 수행되지 않는 한 지역분할주의자들의 정치적 선동에 의해 지역주의는 도별 또는 권역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¹⁾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우리의 사고와 행위양식이 바뀌어야 한다. 남한사회 내부의 지역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통일후 지역주의는 ‘광역화된 지역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더욱 복잡한 양태로 전개될 것이다. 이런 까닭에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 못지않게 지역감정·지역갈등의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²⁾

-
- 1) 남현욱, “통일 이후의 지역갈등 양상과 대비책,” 1995년도 정평위 세미나 「통일 시대의 지역갈등」 (서울: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1995) 참조.
 - 2) 통일기반조성과 관련하여 민족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1995년도 국민여론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귀하는 다음 중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정치적 민주화」(36.8%)와 「경제성장」(34.0%)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지역감정」과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13.8%와 12.5%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노사갈등」(1.0%)과 「세대갈등」(1.9%)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통일연구원, 「199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참조.

2. 지역주의 해소 방안

가. 지역감정 해소방안

지역감정이 주로 사회심리적 차원에서 편견, 억측, 고정관념의 산물이라면, 지역갈등은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객관적 차별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정치균열 현상이다. 그런데 객관적 차별로부터 발생하는 지역갈등 문제는 통치엘리트층의 정책적 결단에 의해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 편견, 억측, 고정관념 등에 기반한 지역감정은 보다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해소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역감정의 해소는 우선 평범한 사람들의 심성 속에 자리잡고 있는 맹목적 우월의식이나 그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따른 특정 지역민에 대한 배타심과 차별의식을 극복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흔히 타집단에 대한 배타심의 조장은 소속집단의 내부결속을 굳건히 하면서 자기집단 중심논리에 대한 강렬한 애착심과 무비판적 충성심을 끌어내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정치적 조작과 상징을 통해 차별대상이나 배제집단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아 대다수 국민의 정치사회에 대한 건전한 비판정신과 도덕심을 마비시키는 ‘사도-마조히즘적 *sado-masochistic*’³⁾ 상

3) E. 프롬은 독일 권위주의체제 형성과정에서의 사회심리적 倒錯상태를 集團的 加·被虐症인 ‘사도-마조히즘적’(sado-masochistic) 상태로 파악하고, 나치즘의 권위주의적 성격의 본질을 사디즘적 및 마조히즘적 충동의 동시적 존재로 설명하고 있다. Eric Fromm, *Escape from Freedom*

황의 창출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일상적 생활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지역감정은 호남지역(인)에 대한 비호남지역(인) 전체의 배타심과 차별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호남정서는 영남과 영남을 제외한 나머지 전지역의 서로 다른 두 집단에서 공유되고 있다. 이 경우 영남인은 호남 및 타지역민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여타 지역민의 반호남정서는 영남인과 함께 호남인을 배제·차별함으로써 우세집단 또는 보다 큰 집단과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감정 속에서 안도감을 얻는 사회심리적 반응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주위에서 영남인(그 지역 거주자 및 출신자)들 가운데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중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들의 사회적 좌절, 불만 등을 배출할 수 있는 통로를 비판적 인식이나 건전한 양식을 통해 찾기보다는 편견, 억측, 이미지 조작 등의 다양한 형태에 의해 생겨난 호남인에 대한 우월감이나 모멸감을 통해 최소한 그들 생활의 경제적·사회적 박탈감을 보상받음으로써, 현존의 정치사회적 체제에 자연스럽게 순응하는 사디즘적 *sadism*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영남인들의 사회심리적 상태에 비해 서울을 비롯한 여타지역민의 호남 차별·배제의식은 자기 자신을 상대적으로 우월한 집단 또는 강력한 권력 속에 해소시켜 그런 힘과 권위에 대해 복종할 뿐 아니라, 오히려 영남인들보다 호남인을 더욱 차별·배제함으로써 그러한 우세집단에 충성

(New York: The Hearst Corporation, 1972), 이상두 역, 「자유에서의 도피」 (서울: 범우사, 1975) 참조.

하고자 하는 마조히즘적 *masochism* 속성의 발로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호남인에 대한 반호남정서의 새디즘적 경향과 매저키즘적 경향은 소외집단에 대한 차별·배제를 통해 상호 共生 관계를 맺으면서 전개되어 온 것이다.

지역감정에 의한 배제와 차별의식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간존엄성 및 인권 문제의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인종, 언어, 문화 등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인간의 양심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편견, 억측, 고정관념의 산물인 지역감정에 의한 배제와 차별의식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유린하는 사고 및 행위양식이라는 점이 널리 강조되어야 한다.

지역감정은 곧 인간존엄성과 인권 문제라는 입장에 기반하여 해소방안을 모색한다면 첫째, 특정 지역(민)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등의 세대간 轉移를 차단하기 위해 가정에서의 올바른 양식을 가르치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개 ‘밥상머리’ 교육에서부터 지역적 차이에 따른 배제와 차별의식이 전이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가정에서의 지역감정의 대물림은 반사회적·비도덕적 의식과 행위양식의 일차적인 사회화과정이라는 점에서 지역감정의 세대감 전이의 비윤리성이 부각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을 통한 해소책의 마련도 중요하다. 이를 위한 교육 체계로는 우선 초등과정에서는 인종, 종교, 문화, 언어, 관습 및 지역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화합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며 공동체적 삶을 가꾸어 가는 모습을 그린 내용을 소개하고, 다음 단계

의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는 편견과 고정관념의 허구성과 폐해를 주지시켜 올바른 인성교육의 확립을 바탕으로 건전한 민족공동체 형성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통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후 남북한의 일체감을 위해서 ‘아이코노그라피 Iconography’를 통한 국민의식의 결속을 고려해 볼 수 있다.⁴⁾ ‘아이코노그라피’는 맹목적인 국수주의로 경도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문화적, 지역적 및 민족적 통합과 결속을 이끌어내는 상징체계를 일컫는 것으로, 민족의식을 길러주는 교육이나 국민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가치체계 및 신념의 창출을 통해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통일후 남북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양심적인 언론문화의 정착을 통해 지역감정의 효율적인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TV, 신문을 비롯한 대중매체의 편견과 이미지 조작 등에 의해 일상적으로 지역감정이 확대·심화되어 왔으며, 특히 선거과정에서 정치권력의 회유와 억압에 의해 또는 권언유착의 오랜 관행에 매몰된 언론인 스스로 정치권력에 영합하기 위해 지역감정을 왜곡하고 부추켜 왔다는 점은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그러므로 지역감정의 조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TV 방송의 ‘불공정성’과 함께 공적인 의사소통의 매개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감정을 비롯한 공적 이슈의 내용과 성격을 결정하고 이를 제기하거나 또는 폐기·왜곡시키는 기체인 신문 등의 언론매체의 ‘편파성’을 심각하게 인

4) 문석남, “지역격차와 지역갈등에 관한 연구: 영·호남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18집 (서울: 한국사회학회, 1984) 참조.

식해야 할 것이다.⁵⁾ 따라서 지역감정 해소와 나아가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는 방송 및 신문 등의 언론매체의 반성과 민주화가 절실히 요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사 및 언론사 내부의 자율적인 노력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양심적인 언론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정부의 계도와 학계, 문화계를 비롯한 지식인사회 및 종교계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비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따른 배제와 차별의식의 부당성을 설득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한편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TV방송과 언론매체를

5) 1993년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신문보도에 대한 만족도”의 전국평균은 「매우만족」 2.4%, 「약간만족」 15.8%, 「보통」 55.8%, 그리고 「약간불만」 18.6%, 「매우불만」 1.7%, 「잘모름」 5.7%로 나타나 불만도(약간 및 매우를 합하여 20.3%)가 만족도(매우 및 약간을 합하여 18.2%)보다 높았다. “TV방송내용에 대한 만족도”의 전국평균은 「매우만족」 3.8%, 「약간만족」 17.2%, 「보통」 52.6%, 그리고 「약간불만」 18.1%, 「매우불만」 2.1%, 「잘모름」 6.2%로 만족도(21%)와 불만도(20.2%)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신문보도에 대한 불만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전국평균 반응도는 「신속하지 못해서」 4.6%, 「편파적이어서」 28%, 「정확하지 못해서」 20.5%, 「필요한 정보부족」 24.8%, 「깊이있는 내용 부족」 21.0%, 「기타」 1.0%로 나타났다. 신문보도에 대한 불만 이유 중에 ‘편파적’인 보도에 대한 불만도가 가장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TV방송내용에 대한 불만이유”를 묻는 응답자의 전국평균 반응도는 「보도내용 불공정」 8.5%, 「교양프로부족」 5.5%, 「프로의 질낮음」 12.7%, 「현실성없음」 11.6%, 「광고많음」 35.4%, 「방송사간의 중복경쟁」 19.7%, 「기타」 0.7%로 나타났다. 광고, 방송사간 경쟁, 프로의 질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은 방송매체의 고유한 속성에 대한 반응이라면 보도의 ‘불공정’에 대한 불만도는 비록 높은 반응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나 간과할 수 없는 항목이다. 아래 <표>는 신문보도 및 방송내용에 대한 불만이유 중 ‘편파적’ 및 ‘불공정’을 지적한 각 지방의 여론을 재구성한 것으로, ‘편파적’ 및 ‘불공정’에 대한 반응도는 호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연구소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국민통합 연구소」(가칭) 또는 「지역화합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을 통해 지역 감정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도 고려할 만하다.

<표 > 신문보도 및 방송내용에 대한 불만이유 (단위: %)

지역	불만이유	신문보도에 대한 불만이유 “편파적이어서”	TV 방송내용에 대한 불만이유 “보도내용 불공정”
서울		29.5	7.8
부산		21.8	8.7
대구		26.3	6.2
인천		27.6	8.6
광주		31.9	14.2
대전		29.6	7.1
경기		28	10.6
강원		33.3	7.7
충북		24.9	7.7
충남		27.4	6.2
전북		30.8	11.7
전남		35.4	13.3
경북		23.2	6.8
경남		25.3	7.6
제주		28.6	6.3
전국		28.0	8.5

자료: 「韓國의 社會指標」(통계청: 1993), pp. 352~356 재구성.

나. 지역갈등 극복과 대안적 모델: '협의주의(consociationalism)'

지역갈등은 정치적 지지기반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국민정당의 창출을 통해 또는 지역주의가 아닌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표하고 반영하는 이념정당의 형성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정당은 오히려 지역주의가 극복되는 단계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념정당의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분단상황에서 법·제도적 제약과 함께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 분위기 속에서 뿌리내리기 어려운 하나의 실험적 시행착오로 귀결되고만 현상을 경험했다. 이와 같은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여 지역갈등과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협의주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민주주의는 최대다수의 의사가 전체를 대변·대표한다는 다수결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이 경우 다수 의사는 '일반의지'(또는 공동선)로 표상되어 전체의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주장된다. 투표에서 나타나는 소수파는 마치 '일반의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로 간주되며 다수파는 '일반의지'를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의사는 부분적인 특수의사가 아니라 일반의지이기 때문에 다수파에 의한 독재가 정당화된다. 그러므로 다수결주의는 '승자독식'의 원칙 아래 '일반의지'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수파의사를 억압하고 완전히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해, 51%만으로도 '승자독식'이 가능한 다수결주의의 정치원리 아래서의 정치적 경쟁은 '全部 아니면 全無 all or nothing'으로 사생결단의 절박한 승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다수파의 과잉대표 현상은 물론 정치적·경제적으로 우월한 다수파가 상대적으로 열등한 소수파집단의 요구를 전면 배제하는 다수파의 독식이 나타나게 된다.⁶⁾

이러한 다수결주의의 원칙은 한국과 같은 지역갈등으로 쪼개진 사회의 통합에 지극히 부정적이다.⁷⁾ 지역주의와 같이 고착화된 갈등구조하에서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패자인 소수파는 경쟁결과에 승복하기 보다는 집권세력에 대한 외면과 수적 열세만을 한탄하게 된다. 한국의 정치적 경쟁과정에서 지금까지 다수결주의가 채택됨으로써 호남인은 영남정권 아래서 영원한 소수파=패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다수결주의는 지역적으로 고착화된 소수파에게 패자의 지위를 영구히 강요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치·경제·문화적으로 고착화된 갈등구조를 갖고 있는 사회에 적용가능성을 시사하는 결사체 모델의 하나인 ‘협의주의’의 적용을 상정해 볼 수 있다.⁸⁾

협의주의는 하위문화 집단간 갈등에 의한 정치적·사회적 균열

6) 지역분할구도를 반영한 13대 및 14대 대통령선거결과는 각각 유효투표의 과반수에 훨씬 미달하는 지지율(13대: 36.6%, 14대: 40%)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자독식’의 원칙에 의해 소수파가 철저히 배제된 채 승자가 정부구성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장악했다.

7) 임혁백, “민주화시대의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틀 모색,” 『시민사회의 도전』 (서울: 나남, 1993), pp. 102~105.

8) 협의주의에 대해서는 Arend Lijphart, “Typologies of Democratic System,”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1, no. 1(1968), pp. 31~39; Hans Daalder, “The Consociational Democracy Theme,” *World Politics* 26(1974); Gerhard Lehmbruch, “Consociational Democracy, Class Conflict, and the New Corporatism,” Schmitter and Lehmbruch eds., *Trends Toward Corporatist Intermediation* (Berkeley Hills: Sage, 1979).

구조가 고착화된 경우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경쟁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경쟁의 결과에 관계없이 권력분점의 보장을 제도화함으로써 상호대결을 피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제도적 방안으로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상이한 스카디나비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과 같은 유럽의 소국들 사이에서 첨예화된 갈등을 해소하고 집단간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창안된 제도적 장치이다. 이는 다수파와 소수파간의 상호 일정한 영역의 자율성을 인정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소수파의 수적 대표성에 대응 또는 그것을 상회하는 권력배분을 보장하여 타협과 공존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합의주의는 多極共存體制로서 체제와해 위협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전제로 체제유지에 대한 구성원들간의 상호 합의와 더불어 엘리트간 타협적 정치문화의 존재에 의해 성립된다.

합의주의의 모든 집단으로 하여금 정부를 구성하게 하는 대연합주의 원칙을 통해 당파적 감정을 해소시키고 각 정치세력간의 합의를 통해 국민통합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다. 합의주의에 기반한 대연합정부는 단순다수원칙에 의한 선거의 중요성을 감소시키고 경쟁이 지배하는 영역의 의도적인 감소, 즉 의도적인 비정치화를 통해 경쟁의 결과에 관계없이 권력분점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대연합주의가 올바르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첫째, 소수파의 사활적인 정치적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며 동시에 소수파의 비토권의 남발을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로서 다수파의 비토권도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합의주의는 정부참여의 지분과 회소자원의 배분에서 소수파에게 일

정한 몫을 보장함으로써 소수파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비례주의의 채택이 필요하다.

협의를주의를 수용하게 되면 단순다수제의 원리에 의한 ‘全部 아니면 全無’와 같은 사활적인 정치경쟁과 갈등관계가 극복되고 하위문화 집단의 엘리트들간의 상호수용을 위한 협상의 제도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협의주의는 지역에 기반한 한국의 정치균열의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유효한 기제일 뿐 아니라, 통일후 정치·사회통합의 효율적 방안으로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나아가 협의주의는 남북한 등가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수용과 협상의 제도화를 바탕으로 통일후 예상되는 남북한간 광역화된 지역갈등과 지역주의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정치적 기제라는 점에서 한국의 정치문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시민사회의 민주화 및 지방화

우리 사회의 지역감정 및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인간존엄성 및 인권 문제의 차원에 입각한 장기적인 해결전망의 모색과 더불어 정치엘리트층의 결단과 합의에 의한 제도적 측면의 해소방안으로 협의주의적 기제를 통한 지역갈등의 해결방안을 살펴 보았다. 그런데 지역감정·지역갈등 및 지역주의의 극복은 시민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참된 지방화를 실현하는 건전한 지역주의의 구현을 모색하는 방안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한 세대 이상의 권위주의적 시대를 극복하면서 민주이행기로 접어든 단계에 이르러서도 선거과정을 계기로 지역감정 및 지역갈등에 기반한 지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지역분할지배체제가 정착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민주화의 왜곡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지역주의의 일차적 책임이 지역감정·지역정서를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이용하는 정치엘리트들, 특히 봉건영주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소수의 정치맹주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권력욕에 사로잡힌 소수의 정치맹주에 의한 지역감정·지역정서를 환기시키는 이른바 지역주의 ‘불러내기’(interpellate)⁹⁾에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만은 없다. 정치맹주들의 지역주의 ‘불러내기’에 계층의 차이나 학식·교양의 유무를 막론하고 일반대중이 그러한 지역주의에 부응·호응한 점에 더욱 근원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정치권의 논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견인당하는 상태에서 민주화의 形骸化된 모습을 만나게 된다. 이는 물론 시민사회의 비윤리성과 취약성의 결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 권위주의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로 주장된 자유민주주의는 그 자체의 합리적 내용에 의해 설득되고 지지되어 왔다

9) 알튀세르의 이론에 의하면,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의식주체의 정치사회적 의식을 무매개적으로 곧장 ‘불러내기’(interpellate)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특정한 문화적 요소, 덕목 또는 심리적 공포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통하여 작동한다고 한다. Louis Althusser,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 (N.Y.: Monthly Review Press, 1971) 참조; Göran Therborn, *The Ideology of Power and the Power of Ideology* (New York: Verso and NLB, 1980), p. 6.

기 보다는 고도의 강권력과 공포심을 수반하는 보족적 이념들에 의해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특히 대통령선거의 경우 지배권력블록에 도전하는 야당이나 비판적 정치세력을 억압하는데 극적 효과를 연출할 수 있었던 이념적 기제로 이른바 ‘색깔론’=‘적색망령’이 항상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공문화의 기저에 자리잡은 공포 분위기를 바탕으로 일반대중의 기억 속에 내장되어 있던 두려움과 위기감을 선거 국면에서 언제든지 환기시켜 반공이데올로기를 쉽게 재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다 지역주의=‘지역망령’ ‘불러내기’가 ‘색깔론’과 함께 짝을 이루면서 지배권력블록의 전가의 보도로 작용했다. 지배권력블록은 비록 선거라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정권교체라도 정권창출의 지역 기반이 바뀌게 되면 그동안 소외, 배제, 차별받아 온 측으로부터 상응하는 형태의 되갚음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여 수적으로 우세한 지역주민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켜 지배권력의 지속적 장악의 불가피성을 호소해왔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지역감정·지역정서에 기반한 지역주의=‘지역망령’은 ‘색깔론’=‘적색망령’과 나란히 ‘불러내기’의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기제로 활용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적색망령’이 점차 사그라들면서 지배권력블록의 전유물이었던 지역주의=‘지역망령’ ‘불러내기’가 여·야 구분할 것 없이 모든 정치집단의 정치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는 점이 뚜렷하게 변화된 현상이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의 등식은 대개 ‘억압적 국가기구의 철폐

와 시민사회의 자율성의 증대' 또는 '국가부문의 퇴조와 시민사회의 등장'이라는 식으로 이해되면서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가 민주화의 보루로 인식되었다.¹⁰⁾ 달리말해 억압적 국가가 퇴진하게 되면 그 공백을 시민사회가 메꾸게 될 것이며, 이 경우 군부, 검·경찰, 비효율적인 관료기구 및 준정부기구적 외곽단체 등의 시민사회 배제논리와 강압적 통제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기업, 노동조합, 종교계, 학계·교육계, 문화계, 언론 등의 시민사회의 다양한 부문이 자율화되고 활성화됨으로써 민주화의 과정 속에 순조롭게 진입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에 기반한 논리였다.

그러나 민주이행기에 들어서면서 맞이한 사회적 진통과 정치적 경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초래하였는데,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는 국가의 간섭이 배제되고 자율화되는 만큼 오히려 혼돈, 무질서, 부패, 비윤리성을 노정했다. 물론 혼돈과 무질서는 시민사회의 각 부문의 자율화의 경험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고, 자기정체성의 확립이 미진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과도기적 상황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한국자본주의의 발전의 천민성과 부르조아윤리의 부재의 산물"로 볼 수 있다.¹¹⁾

시민사회를 시장영역과 사회윤리적 영역으로 나뉘본다면, 시장영역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민주적 개방 이후 독과점적 생산체제와 압도적인 시장지배를 중심으로 한 과두재벌집단의 지배력만

10) 조민, "새로운 정치와 시민사회의 민주화," 「현상과 인식」, 제19권 3호 (서울: 한국인문사회과학원, 1995) 참조.

11) 최장집, "1992년 대선과 한국의 민주적 이행,"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서울: 한길사, 1993), p. 405.

이 관철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문화의 최소한의 자본주의적 윤리마저 기대하기조차 무척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비시장적 사회 윤리적 영역인 학·교육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언론¹²⁾ 등의 부문도 윤리적·도덕적 보루가 아님이 밝혀지면서, 시장영역이나 사회윤리적 영역을 막론하고 모두 도덕성을 지니지 못한 채 물질만능주의의 천민성을 행동규범으로 삼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 결과 한국의 시민사회는 민주화의 보루라기 보다는 시민사회 자체가 먼저 개혁되고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민주화의 대상영역임이 확인되었다. 이를테면 한국의 시민사회는 물질적으로 압축성장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공동체없는 '시장의 논리'에만 매몰되어 공적 관념과 사회정의의 문제는 도외시된 채 윤리적·도덕적 영역의 발전가능성이 차단되어 시민사회 자체가 왜곡되었다고 하겠다.¹³⁾ 더욱이 시민사회의 도덕의식의 마비에 따른 중산층을 비롯한 일반대중의 이기주의와 정치적 맹목성은 지역주의와 결합하여 투표과정에서 민주주의의 부정적 특성인 衆愚性을 노정하기도 한다.

12) 시민사회의 의사를 대표하고 전달하면서 정치적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언론은,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 원칙과 양식을 계몽하고 선도하기 보다는 거꾸로 막강한 위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몽매주의를 사회화하고,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왜곡시키거나 은폐해 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언론의 민주화는 사회민주화의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다.

13) 시민사회 내의 개인, 단체, 집단 등의 다양한 부문이 공적 가치 및 사회정의를 중시하는 훈련과 전통을 쌓을 수 있는 자생적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한편으로 국가는 재벌, 언론, 자본가치지향적인 종교인·지식인 등 시민사회 내의 가장 우세한 부문과의 결합을 통해 지배연합을 형성하여 시민사회의 비윤리성을 방조하게 됨으로써 시민사회의 성격을 한층 왜곡시키게 되었다.

우리 사회의 지역감정·지역갈등의 근원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정치사회의 개혁과 더불어 왜 시민사회의 민주화가 절실히 요청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이러한 사정에 기인하다. 그러므로 민주화 프로그램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회규범, 새로운 연대를 지닌 사회운동, 결사 그리고 공론영역에의 능동적·적극적인 관심 등을 통해 결코 정치적 대표체계 즉, 정치사회에 의해 대변될 수 없는 과제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¹⁴⁾ 요컨대 시민사회의 민주화가 뒷받침될 경우 지역적 차이에 의한 배제와 차별의식의 부당성에 대한 도덕적 비판의 힘이 강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의 정치적 이용을 차단하고 나아가 정치사회의 개혁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우리 사회의 지역주의는 한편으로는 세계화에 부응하여 지방화의 참된 구현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건전한 지역주의의 복원을 통해 해소될 수도 있다. 세계화는 지구촌의 상호의존성이 증대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14) 시민사회의 민주화 또는 재구성은 본질적으로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이루어질 수는 없다. 비도덕적 사회에서 민주적 사회로의 진전은 개개인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의사소통구조의 다양화, 결사를 보증하는 제권리의 확보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집합적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자율적 권리체계가 생명력을 지니고 확장됨으로써 그 영향이 시민사회의 경계를 넘어 정치문화의 발전을-정치문화 발전의 전제이기도 하면서-고무하게 된다. 이처럼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에 대한 영향력의 확장과 민주화는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사회조직, 즉 공중과 결사수준의 정도에 달려있다. Jean L. Cohen and Andrew Arato, "Discourse Ethics and Civil Society,"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New York: The MIT Press, 1992), pp. 345~419.

이해될 수 있다면, ‘지방화’(localization)는 각 지방이 중앙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나 지방의 정치·경제적 자립과 자율적인 사회조직 및 지방문화의 창조 등 지역생활에 뿌리내리기 위한 지방의 자기 충족적 상태의 지향을 가리키는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 지방화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정치적 동원메카니즘으로 기능하는 지역주의의 부정적 측면과는 달리 한국사회의 발전 프로그램으로서의 지역주의의 건전한 기능과 효능은 주목할 만하다.¹⁵⁾ 이러한 지역주의의 의미는 지역주의 자체가 어느 면에서 가공된 의식일지라도 지역이라는 공동사회에 대해 가지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정서적·심리적 의식상태에 기반해 있고, 세계화와 지방화의 공시적 현상 속에서 지방이 세계화·정보화시대의 사회발전의 전략적 주체라는 점에서도 지방화와 관련된 지역주의의 새로운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¹⁶⁾

건전한 지역주의를 창출하는 지방화의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부문에서는 분권주의의 확립에 토대를 둔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통해 지방 단위의 정치사회적 갈등을 중앙정부의 역할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¹⁷⁾ 이와 함께 중앙·지방간 및 지방 상호간의 갈등

15) 유재일, “지역주의의 정치적 동원과 극복과제,” 『정치개혁 아젠다10』 (서울: 백산서당, 1995), p. 104.

16)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최의수, “지역시민사회와 지역주의의 지역간 분화”; 조명래, “지방화시대 진정한 지역발전의 조건,” 한국공간환경연구회 엮음, 『지역불균형연구』 (서울: 한울, 1994) 참조.

17)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특집1: 지방자치 3년의 평가와 과제,” 『동향과 전망』 (1994 겨울) 및 “세계의 지방자치제: 진보, 권력, 민주주의,” 『동향

을 조정·중재할 수 있는 상위의 권위체로서 중앙정부의 합리적인 위상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¹⁸⁾

둘째, 경제부문에서는 지역격차와 불균등발전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충족적 경제구조의 확립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집권적인 축적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최근 기업가적 지방정부가 내부적으로 완결된 생산·재생산체제를 통해 국민경제 및 세계경제에서 상대적인 전문성과 분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강조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국제경쟁력의 확보와 함께 지방정부의 경제적 자립을 토대로 독자적 영역을 확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지방화는 한국사회 모든 부분의 자율화와 성숙을 전제한 것이지만, 지방화를 계기로 한국사회 전체의 자율화와 성숙의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지방화는 지방시민사회 성원들의 활동과 일상적 삶의 터전에서 자연스럽게 충족되어야 한다. 어느 면에서 중앙집권화 및 중앙집중화에 대한 대응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방화는 전체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부분체계인 지역사회공동체가 정치적 의사결정과 집행, 경제적 자원의 관리, 문화의 창조 및 향수 등의 주요 공동체 활동에서 전체 체계로부터의 자율성을 증대시켜 나가는 과정 및 그 결과라는 점에서, ¹⁹⁾ 지방화의 척

과 전망」(1995 여름) 참조.

18) 정책자료 94-5,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간 갈등현상과 해소방안: 님비(NIMBY)현상을 중심으로」(政務長官(第1)室); 한·미·일 공동세미나 주제발표논문집, 「지방화시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중앙과 지방간의 조화 모색」(政務長官(第1)室, 1995. 4. 24) 참조.

19) 임희섭, “한국사회의 지방화와 국제화의 정책적 전망,” 한국사회학회

도는 곧 자율화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방화가 완결되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의 창달이 중요한 과제로 설정된다. 지방문화의 창달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토애와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함으로써 지역주의의 건강한 발현을 도모할 수 있다. 우리의 정신문화의 요체가 민족전통문화라면, 민족전통문화의 뿌리는 향토문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향토고유문화의 진흥 및 발전에 대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민간단체 등의 관심을 적극 촉구하는 노력과 더불어 지역시민 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복원시켜 주민들 사이의 연대감을 점차 회복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지역주의에 대한 이해는 일반적으로 지역감정·지역갈등에 기반한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왔으나, 다른 한편 지역의 자율성과 민주성의 규범적 목표로 보는 입장에서는 지역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감정·지역갈등 및 지역주의의 극복방안으로 시민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참된 지방화를 실현하는 건전한 지역주의의 구현을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편, 「국제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지방화」(서울: 나남, 1994), p. 431.

V. 결 론

우리 사회의 지역갈등 문제는 계급갈등 및 노사갈등 또는 세대갈등 등의 문제가 지닌 보편적 특성과는 달리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척 주목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지역감정·지역갈등이 국민통합과 민주화 과정에 미치는 커다란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실천적 해소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지역감정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연구 및 세미나 또는 양식있는 시민단체 등이 지역감정의 해소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과 시도들의 대부분은 정부차원이든 민간차원이든 간에 체계적인 연구의 축적을 바탕으로 진지하고 장기적인 전망에 근거하기 보다는 시의적이고 즉흥적인 관심에 따라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지속성을 지니지 못했다.¹⁾ 그 결과 지역감정·지역갈등의 본격적인 논의와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항상 미봉상태로 덮어진채 미루어져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역갈등 문제를 파해치는 것 자체가 도리어 아물지 않은 상처를 건드리는 격이 된다고 우려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화해와 하나됨을 통해 민족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개척해

1) 1988년 여·야당의 합의에 의해 지역감정 해소를 위하여 「민주화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지역감정의 실태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당파적 논쟁 속에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해산되고 말았다.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인식과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망된다.

우리 사회의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지역감정·지역갈등의 역사성을 지나치게 부각시킴으로써 오히려 지역감정·지역갈등을 무리하게 ‘발명’ 해내는 역기능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격차와 관련하여, 소외지역의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간 경제격차를 줄여나가는 한편, 민간경제 부문에서나 국가투·융자기관에서 지역차별화를 철폐시키는 정책적 차원의 결단이 요구된다. 셋째, 정치엘리트 충원과정의 私的 緣故를 타파하고 인사정책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사적 연고, 특히 地緣에 의한 엘리트 충원구조는 반드시 타파되어야 하며, 기회의 균등이 모든 지역출신에게 열려있어야 한다. 편견, 억측, 고정관념에 기반한 지역감정을 극복하려는 노력에 비해 지역격차의 해소와 인재등용과정 및 엘리트 충원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문제는 결코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다. 따라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올바른 문제인식과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

선거와 지역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서는, ‘지역망령’이 선거국면마다 부각되면서 우리사회의 합리적·이성적인 정치문화의 형성과정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지역감정·지역갈등에 기반한 지역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보다 깊이 각인된다면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공동체적 논리와 윤리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근대적 민족국가의 완결을 위한 민족통일의

과정에 커다란 걸림돌로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분단체제 아래서 남북한 대결과 갈등의식의 과잉내면화 상태에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사회 내부의 지역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분단극복과 민족통일의 과정은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에 그것도 남북분단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감정으로 인한 지역간 대립과 갈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발전에 크나큰 장애일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더욱이 영호남 지역갈등의 극복을 통한 동서화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통일을 맞이한다면, 남한사회의 동서분열의 구조 위에 남북간 지역갈등의 '광역화' 현상이 증첩되어 통일한국의 미래의 전망을 무척 어둡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지역갈등은 인종, 민족, 종교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근원적' 갈등요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결코 한 사회의 통합의 질적 수준을 규정짓는 숙명적인 것으로 보거나 또는 극복이 불가능한 문제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동질적인 민족이다. 우리는 오랜 수난의 역사 속에서 민족의식을 통한 강인한 구심력을 발휘해 온 민족이라는 점에서 지역감정, 지역갈등, 지역주의를 깨뜨릴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민족통일은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즉각적인 물질적 풍요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합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또한 많은 인내를 요하는 지난한

과정일 수도 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희생과 고통을 함께 감내해 나가는 한편, 통일에 의한 발전과 변영의 과실도 특정 계층과 지역에 치우침이 없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후 남북한간 지역갈등 문제가 현실화되는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따른 지나친 기대의 자제를 호소하는 것과 아울러 남북한 주민 모두 통일한국인으로서의 일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민족적 일체성의 근원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북한지역 주민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고 남한지역 주민의 우월의식의 발현을 경계하여 북한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민족내부의 식민지’ 의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사회통합의 핵심은 남북한 주민 모두 한민족으로서의 정체감을 확인하는 데에 있다. 민족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남한사회에서는 무엇보다 물신주의의 풍조에서 벗어나 인간중심의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요망된다. 개개인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사회에서만 공동체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남한 사회 내부에서 먼저 경제정의 구현과 정치 및 사회민주화가 실현되는 「건강한 민주사회」를 가꾸어 나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사회학적 관심」. 서울: 박영사, 1981.
- 김만흠. 「한국사회지역갈등연구」.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87.
- 남영신. 「지역패권주의와 한국」. 서울: 새문사, 1991.
- 민족통일연구원. 「199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상공부. 「국회지역감정해소특위 요구자료 I」. 서울: 상공부, 1988.
- 이이화. 「한국의 파벌」. 서울: 어문각, 1983.
- 최홍국. 「한국인의 투표성향과 지역감정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88.
- 프롬·이상두 역. 「자유에서의 도피」. 서울: 범우사, 1975.
- 한·미·일 공동세미나 주제발표논문집. 「지방화시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중앙과 지방간의 조화 모색」. 政務長官(第1)室, 1995. 4. 24.
- Allport, G. W.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ss.: Addison Wesley, 1954.
- Althusser, Louis.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 N.Y.: Monthly Review Press, 1971.
-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New York: Verso, 1983.

- Boudon and Raymond.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Social Action*.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81.
- Fromm, Eric. *Escape from Freedom*. New York: The Hearst Corporation, 1972.
- Hirshman, A. O.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8.
- . *Voice, Exit, Voice, and Loyal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 Hobsbawm, Eric and Ranger, Trence eds. *The Invention of Tradition*.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83.
- Therborn, Göran. *The Ideology of Power and the Power of Ideology*. Verso and NLB, 1980.
- Tom, Nairn. *The Break-up of Britain*. London: New Left Books, 1977.

2. 논 문

- 김만흠. “제6공화국과 지역감정의 심화.” 「지역감정연구」. 서울: 학민사, 1991.
- . “한국의 정치균열에 관한 연구: 지역균열의 정치과정에 대한 구조적 접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8).

- 김용학. “엘리트 층원에 있어서의 지역격차.”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서울: 성원사, 1989.
- 김진국. “영·호남대학생의 상호간 차이 지각 연구.” 「사회심리학 연구」 3~2. 서울: 한국사회심리학연구회, 1987.
- 김혜숙.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 세대간 전이는 존재하는가?”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서울: 성원사, 1988.
- 나간채. “지역(민)간의 사회적 거리감.”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 지역갈등」. 서울: 성원사, 1989.
- 남현욱. “통일 이후의 지역갈등 양상과 대비책.” 1995년도 정평위 세미나 「통일 시대의 지역갈등」. 서울: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1995.
- 문석남. “지역격차와 지역갈등에 관한 연구: 영·호남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18집. 서울: 한국사회학회, 1984.
- 박용남. “오늘의 지역감정 실태.” 「지역감정연구」. 서울: 학민사, 1991.
- 안병만. “한국의 파워 엘리트 연구.”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정치」. 서울: 법문사, 1993.
- 유석춘·심재범.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두가지 기반: 계급(계층)의 식과 지역차별의식.”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감정」. 서울: 성원사, 1989.
- 유재일. “지역주의의 정치적 동원과 극복과제.” 「정치개혁 아젠다 10」. 서울: 백산서당, 1995.

- 이두엽. “사투리의 정치학: TV 매체와 지역감정.” 『지역감정연구』. 서울: 학민사, 1991.
- 이병휴. “지역갈등의 역사.” 『지역감정연구』. 서울: 학민사, 1991.
- 임혁백. “민주화시대의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틀 모색.” 『시민사회의 도전』. 서울: 나남, 1993.
- 임희섭. “한국사회의 지방화와 국제화의 정책적 전망.” 한국사회학회 편. 『국제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지방화』. 서울: 나남, 1994.
- 정근식. “광주민중항쟁과 지역문제.” 『지역감정연구』. 서울: 학민사, 1991.
- 조경근. “정치사회화 시각에서 본 영·호남간 지역감정 실재와 악화 및 그 해소.” 1987년 한국정치학회 재북미 정치학자회 합동학술대회 발표논문.
- 조명래. “영·호남 갈등의 사적 유물론적 고찰.” 『지역불균형연구』. 서울: 한울, 1994.
- . “지방화시대 진정한 지역발전의 조건.” 한국공간환경연구회 엮음. 『지역불균형연구』. 서울: 한울, 1994.
- 조 민. “새로운 정치와 시민사회의 민주화.” 『현상과 인식』, 제 19권 3호. 서울: 한국인문사회과학원, 1995.
- 최장집. “1992년 대선과 한국의 민주적 이행.”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서울: 한길사, 1993.
- . “지역의식 무엇이 문제인가.” 『동향과 전망』, 창간호. 서울: 한국사회연구소, 1988.

- Heim, Carol E. “지역주의와 국민경제발전: 이론적 배경과 미국의 경험.” 「국가발전과 지역주의」, 금호문화재단 주최 국제학술회의(1987. 5. 7~9) 자료집.
- Ashmore, R. D & Boca, Del K. F. “Conceptual approaches to stereotypes and stereotyping.” In D. L. Hamilton ed.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 Hillsdale, N.J.: LRA, 1981.
- _____. “Psychological approach to understanding intergroup conflict.” In P. A. Katz ed. *Towards the Elimination of Racism*. New York: Pergamon Press, 1976.
- Chesler, M.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ies of racism.” In P. A. Katz ed. *Towards the Elimination of Racism*. New York: Pergamon Press, 1976.
- Cohen, Jean L and Arato, Andrew. “Discourse Ethics and Civil Society.”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New York: The MIT Press, 1992.
- Daalder, Hans. “The Consociational Democracy Theme.” *World Politics*, 26 (1974).
- Giddens, K. Knorr-Cetina and Cicourel, Anthony, A. V. “Agency, Institution and Time-Space Analysis.” *Advances in Social Theory and Methodology: Toward an Intergration of Micro and Macro Sociologie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1.

Lehmbruch, Gerhard. "Consociational Democracy, Class Conflict, and the New Corporatism." In Schmitter and Lehmbruch eds. *Trends Toward Corporatist Intermediation*. Beverly Hills: Sage, 1979.

Lijphart, Arend. "Typologies of Democratic System."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1, no. 1 (1968).

3. 기 타

「동아일보」.

「시사저널」.

「영조실록」, 권53.

「한겨레21」, 제77호.

「한국일보」.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政勢 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
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
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
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
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金正日 體制下的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III): 「근로자」 해제
- 95-21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
-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統一政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葉전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안보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
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
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北韓의 對外 개방 現況과 전망: 外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 94-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 95-0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5~1996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
(1994)

<資 料>

92-01 統一 및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I)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I)

<통일문화시리즈>

94-01 統一文化研究(上)

94-02 統一文化研究(下)

95-01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上)

95-02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下)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研究報告書 95-24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 5-19
전화 : 232-4726, FAX : 232-5341
印刷處 성진문예사 전화 : 273-5577
印刷日 1995년 12월 일
發行日 1995년 12월 일
